# 第253回國會 (臨時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5年4月19日(火)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

**審査된案件**

1. 업무현황보고(계속) ····· 1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정의용・김문수・김부겸・노회찬・박성범・원희룡・유선호・이혜훈・이화영・임종석・정병국・김명자・최성 의원 발의) ····· 5
1. 업무현황보고(계속) ····· 6
 가. 외교통상부 소관(계속)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임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국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교통상부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대통령의 독일 및 터키 방문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1. 업무현황보고(계속)

### 가. 외교통상부 소관

**○위원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 그리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0일부터 18일간 대통령님의 독일・터키 방문을 수행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 직전에는 4월 5일부터 8일간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아시아협력대화 각료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첫째로 2005년도 외교부의 주요업무계획과, 두 번째 대통령님의 금번 독일 국빈방문 및 터키 공식방문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신임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최일송 구주국장입니다.

신임 김성배 다자통상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성배 국장은 고위공무원 교류에 의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외교부로 전임된 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외교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조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올해를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하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업무계획의 기본 골격은 4대 정책목표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20개 이행과제 그리고 2개의 혁신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목표인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외교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 외교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외교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사 콜센터를 금년 4월 1일부로 전면 가동하여 영사민원의 24시간 상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테러·자연재해 등 해외 긴급사태 발생 시 즉시 현지에 투입할 수 있는 24시간 기동팀이 지난 4월 4일 창설되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e-Consul 서비스를 확대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고,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고객평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서는 금년 1월부터 네티즌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교부 포털사이트의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방 순회 세미나, 다양한 외교부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더욱 친근한 외교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동북아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와 관련해서 먼저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한일관계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독도문제는 영토주권의 문제로서 한일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기조하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역사인식과 과거사 문제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진실한 사죄와 반성을 통한 용서와 화해라는 인류 보편적 방식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으로서 전 재외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전 세계 각종 지식·정보자료와 문헌기록에 남아 있는 오류를 시정하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회담 복귀를 설득하여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하고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과 지혜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포괄적·단계적 핵폐기 방안의 수용을 적극 설득해 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양국 정상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양국 간의 다양한 협의체제와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방위비 분담협상, 주한 미대사관 이전문제, 전략적 유연성, FTA 협상 등 양국 간 주요현안을 타결·진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기본 토대로 해서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역동적 행위자로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정책목표인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입니다.

먼저 전방위 정상외교를 활성화해서 정상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신규시장 확보와 외국인투자 유치,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고위급 방문 외교도 지역적 안배와 전략적 고려를 통해서 정상외교를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는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되는데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각급 회의의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지도력을 보여 주고, APEC의 7대 역점과제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력을 발휘함으로써 APEC의 내실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정상회의를 포함한 20여 회 이상의 회의를 지방에서 분산 개최해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와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도국에 대한 대외공적원조도 우리의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민총소득의 0.06%에 불과한 ODA 규모를 4년 후인 2009년까지 0.1%로 단계적으로 증액해 나간다는 계획하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서 국제기구분담금 체납액은 금년 말에 약 1억 1800만 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분담금 체납은 국제적 신인도 저하는 물론 우리의 국제기구 요직 진출에도 장애가 되는 만큼 조속한 체납 해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채정 위원장님과 통외통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목표인 선진 통상국가 구

현을 위한 경제외교입니다.

세계경제 흐름에 적극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 27개국 이상과 FTA를 추진해 나갈 예정인데 작년 말 협상이 타결된 싱가포르와의 FTA를 연내에 발효시키고 일본, ASEAN, 캐나다,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본격적인 FTA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 및 통상압력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해서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의 김 수입규제 등 5건의 분쟁이 WTO에 계류 중인데 5개 분쟁에서 최소 4건 이상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결과 작성된 우리나라 국별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서 WTO 사무국이 지난주 4월 12일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원안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 혁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금년에 국민만족 영사서비스 체제 구축과 선진외교를 위한 인사조직 혁신을 2개의 역점 추진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다양한 혁신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외교부는 직위공모제, 다면평가를 어느 부처보다 일찍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선도적인 인사조직 혁신을 기울여 왔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고위직 신분보장 완화와 대명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무공무원법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장관과 공관장 간 성과이행계약서를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과장급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재외공관장직의 개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충원과 우수한 해외 인재 특채를 통해서 충원경로를 다양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신설된 FTA국에 타 부처 직원 등 외부전문가 29명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같은 과감한 혁신노력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외교통상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외교통상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과 터키 공식방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쾰러 독일 대통령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4일간 독일 수도 베를린과 유럽 관문도시인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쾰러 대통령 및 슈뢰더 총리와의 정상회담, 독일연방하원의장 면담, 기민당 야당당수 접견, 주요 독일의회인사 초청 만찬, 독일 통일관련 주요인사 접견을 가졌으며 경제일정으로는 한·독 경제인 오찬 및 독일 주요 CEO 초청 라운드테이블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독일 방문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독일 측 협조를 확보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독일정부와 의회는 우리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왔고 이번 방문 시에도 쾰러 대통령과 슈뢰더 총리는 이에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간 유럽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과 연수·학술 사업을 실시해 온 독일정부로부터 북한의 변화와 개혁·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과 실질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역이 168억 불에 이르고 있는데 1, 2년 내에 200억 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독 경제인 오찬, 독일 CEO 초청 라운드테이블회의 등을 통해서 독일 경제인들에게 우리 투자환경 개선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그 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방문 중에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업체인 Bosch사, 유럽 최대 반도체회사인 ST Microelectronics사 등 독일 기업들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IT 첨단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독일월드컵 개막식이 개최되는 바이에른주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채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한독 IT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MOU도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 성과로는 정상회담과 독일통일 관련인사 접견을 통해서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독일통일의 진행과정과 통일 후 내적 통합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점검해 보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통일 관련인사 접견 시 이들은 통일 전에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을 통한 동질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성과 통일 후의 사회경제적 통합의 어려움, 세 번째 갑작스러운 통일에의 대비 필요성, 네 번째 관련정책 추진 시 상대 측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은 철저한 과거사 처리로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해서 민족통일 달성과 EU통합을 주도한 독일의 경험을 공유해서 우리의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데 귀중한 시사점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금년은 '2005년 한국의 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행사의 성공을 위하여 독일 측 협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한국과 독일 간에 문화교류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금년 초에 한·독 간 입국체류 양해각서 발효와 더불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류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다음달 중순 5월 10일부터 예정된 임채정 위원장님의 독일 방문은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성과를 더욱 다지고 보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독일 총리가 내년 1월에 방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터키 방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4월 14일 앙카라에 도착해서 세제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에르도안 총리와 오찬회담, 국회의장 면담, 한국전 참전탑 헌화 및 참전용사 격려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이스탄불을 방문해서 터키 주요경제인 초청 오찬간담회, 동포 간담회 및 현지 진출기업 시찰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한편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에르도안 총리의 특별제의로 4월 16일 보스포르스 해협 선상에서 우리 기업인의 취업허가 간소화문제라든지 대터키 투자문제 등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격의 없이 협의를 하면서 양국 지도자 간에 유대를 돈독히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터키 공식방문은 1957년 양국이 수교한 이래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문이었습니다. 매우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터키는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연인원 1만 5000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741명이 전사하는 등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 양국의 협력과 관련해서 터키에서는 대한국 무역적자가 상당하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터키에 대한 무역구매를 위해서 통상구매사절단을 보내기로 했고 우리가 3년간 100만 불을 지원해서 IT협력센터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도 DMB를 시연하는 소개 행사도 가졌습니다.

또 양국 간에 방산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기전차 공동개발사업이라든지 공군기본훈련기 공동생산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터키 투자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의 생산설비를 증설한다든지 로템사의 전동차량 공동생산 문제 등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에 대한 터키 측의 협조를 확보했습니다. 터키 측은 우리 자이툰 부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군수지원 등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이 한·터 수교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한·터키 우정의 해'를 선포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해서 전통우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 대통령의 독일 및 터키 방문성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성립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한 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정의용·김문수·김부겸·노회찬·박성범·원희룡·유선호·이혜훈·이화영·임종석·정병국·김명자·최성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2항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의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월 18일에서 27일까지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목격한 피해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동 피해지역을 위한 구호와 복구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계속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대표단은 지진해일 발생 직후 별도로 피해지역을 다녀오신 다른 의원님들과도 협의해서 이번 지진해일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과 함께 앞으로 해외긴급구호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앞으로 3년간 12월 26일을 지진해일 피해국가 국민들과의 연대의 날로 지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 국가의 피해복구와 중장기적 재건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구체적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과, 둘째 긴급구호 원조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셋째 우리나라의 대외공적개발원조 규모의 확대와 원조집행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인명손실과 재산상 피해를 입은 해당국 국민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및 지속적 경제개발 지원노력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동 결의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진해일로 인한 남아시아 국가의 재건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 대해 종합적·구체적 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회보고, 긴급구호 원조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대외공적개발원조 규모의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지원액은 긴급구호 500만 불, 재건지원 4500만 불 등 총 5000만 불로서 긴급구호 500만 불은 NGO지원 등에 지원할 65만 불을 제외한 435만 불이 이미 집행되었고, 재건지원을 위한 4500만 불 중 2005년도에 집행계획인 2000만 불은 예비비 또는 추경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구체적 지원계획은 수원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2004년도 국민총소득 대비 대외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06%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같은 해 OECD 비율 0.2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긴급재난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외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및 원조 집행기관의 조직과 기능정비를 촉구하는 이 결의안의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결의안의 내용 중 긴급구호 원조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대외공적개발원조 규모의 확대 등은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의 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남아시아 지진해일에 한정된 결의안보다는 일반적인 국제적 재난지원을 위한 결의안으로 제목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앞으로 3년간 12월 26일을 피해국가 국민들과의 연대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그 구체적 필요성 및 실익에 대하여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정**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수정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결의안의 제목을 결의안 내용에 부합하도록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 지원 및 해외 긴급구호체제 강화 촉구결의안으로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결의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 업무현황보고(계속)

### 가. 외교통상부 소관(계속)

(10시40분)

**○위원장 임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다시 돌아가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위원** 장관 갔다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30일 외교통상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장관께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서 '외교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 대통령께서 명쾌한 지침을 주셔서 앞길을 가르쳐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했습니다.

**○홍준표 위원** 이것이 좀 지나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께서 외교를 알겠습니까? 모르거든요. 거의 보면 외교정책을 자문하는 참모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외교선생은 외교부장관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외교를 아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아마 이승만 대통령하고 몇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외교선생 노릇을 하는 외교부장관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동북아균형자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후에 외교적으로 실언을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2년도 후보시절에 '국내 정치용으로 사진 찍기 위해서 미국 가지 않는다,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하면 다 깽판쳐도 괜찮다, 미국 안 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 2003년도에 미국 가셔 가지고 '53년 전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을 경우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굉장히 국내에서 반발하니까 돌아와서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냥 헛소리 한번 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 가서는 공산당 허용 발언을 했고, 중국 가서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2004년도 들어와서 7월 21일 제주도 한일 양국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간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호칭을 했어요. 작년 11월 13일 방미 중에 북핵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 핵문제 일리 있다', 그리고 2005년도 들어와서 동북아균형자론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 발언을 했어요. YS가 한일관계 이야기하면서 일본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YS 대통령 재임 중 내내 안 좋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외교적인 실언을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한국 국민들 중에 미국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외교적인 실언을 하는, 사실상 외교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모시면서 장관께서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한국 외교부를 책임지고 있고, 외교관계를 총 책임지고 있고 또 대통령의 외교관계 선생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 지도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장관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반기문 장관님의 실용주의 외교노선, 참으로 국가를 위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민족주의 내세우면서 엉뚱한 소리 한 말씀하시면 그것 수습하느라고 정신없고, 내가 그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장관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겁니다. 대통령은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전문 분야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외교는 모르십니다. 지금은 한 3년 되셨기 때문에 좀 아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의 외교 총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의 동북아균형자론 이것은 참으로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동북아균형자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외교부 업무보고를 보면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북아균형자론하고는 조금 틀리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동북아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의 접근으로 이것은 일응 옳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지금 동북아균형자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짓입니다. 참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민족적 자존심도 좋고 한데, 걱정이 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북아균형자론하고 지금 외교부에서 보고한 동북아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하고 어느 부분이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같은 겁니다.

**○홍준표 위원** 같은 건 아니지요.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동북아균형자론을 이야기할 때는 처음에는 북방 3각, 남방 3각에서 이탈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가 문제가 되니까 중국과 일본이 패권주의 할 때 그때 균형자 하겠다 그런 뜻이었다고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북방 3각, 남방 3각 그런 말씀은 없었고 정부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는데……

**○홍준표 위원** 그래서 균형자론의 실체는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동북아균형자라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한 일종의 외교 분야에서 추구해야 될 전략적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균형자론이 정확하게 뭡니까? 어떤 뜻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것이 흔히 잘못 오해되고 있는, 마치 19세기나 20세기 초의 세력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입각한 균형자 같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홍준표 위원** 그러면 어떤 균형자론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북아의 현재 정세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쓰라리고 처절한 고통을 당한 경우가 있었고 지금 현재 동북아 정세는 냉전 이후에도 상당히 냉전적인 잔재도 아직까지 있고 불안정한 요인이 있으니까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우선은 우리의 국가위상을 지켜 나가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화도 발전이 되고 정치·경제·사회가 발전해서……

**○홍준표 위원** 장관님, 지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당위론이고 균형자론이라는 뜻을 정확히 표현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래서 이걸 어떤 물리적인 힘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가치적인, 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갈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위원** 장관님은 동북아균형자론의 실체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동북아균형자론이라는 게 처음에 한미동맹 탈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비난이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이 만약 패권주의 취하면서 서로 다툴 때에는 한국이 중국의 편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도 있고 또는 일본을 편들 수도 있고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한미동맹을 탈피한다 이런 말씀은 전혀 우리 정부에서 누구도,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고 지난 3월 30일 외교부 업무보고 받으실 때에도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동북아균형자는 한미동맹에 기초를 둔다 이런 점을 아주 분명히……

**○홍준표 위원** 그런데 한미동맹에 기초를 둔다고 하면서 왜 또 친미주의자 발언을 합니까? 또 어제인가 보니까 ‘외교부에는 친미주의자 없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거 하시기 전에 균형자론의 실체를 좀 이야기해 보라 이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장관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틀려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같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것만 정확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지금 이 균형자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홍준표 위원** 그러니까 그 실체만 이야기해 보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19세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동북아의 화해, 평화, 공동번영 이런 것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이제까지 축적해 온 민주적·경제적인 발전 또 우리 국가의 위상, 우리의 국력 이런 걸 갖다가 적절히 활용해 나가면서 우리가 조화롭게 또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황이 전개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면 장관님, 내가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동북아의 화해, 평화, 번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DJ 정부에서 우리가 동북아의 화해, 평화, 번영 추구하는 게 기본책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YS 정부는 안 그랬습니까? 노태우 정부는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게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지난 정부하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외교정책을 왜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외교적인 실언을 자꾸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난 정부에서 추구되지 않던 새로운 정책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데 위원님, 우리 정부도 우리 국가도 죽 지나오면서 크게 국위가 신장되어 왔습니다. 과거 5공 때나 6공 때 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렇게 죽 오면서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치나 이런 것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힘을 한번 발휘해 보자는 건데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물리적인 힘을 자꾸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치추구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원칙, 정의, 대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조정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그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질의가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내용을 채워 나가시도록 합시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어 가지만 간략하게 1~2분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했을 때 제 발언을 갖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참모지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님을 어떻게…… 아까 선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외교에 관한 한 최고의 책임자고 최고의 외교관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규정에 의해서도 다 그렇고 또 대통령의 외교철학이라든지 외교방침 이런 걸 집행하는 책임은 제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의 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교부의 수장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하는 의미에 있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있고 또 대통령까지도 안 가고 제가 통상적으로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책임지고 다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가의 큰 중요한 줄기, 정책의 줄기라든지 방향 이런 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시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제가 업무보고 모두에서 최고통치자의 외교 철학이나 비전이 외교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조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러한 국가원수나 최고통치자의 방향이라든가 비전이 당대 시대의 외교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것이 대개 국제사회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너무 오해가 있으시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장관님, 파키스탄 ACD 참가 그리고 독일·터키 대통령 순방 수행 등등 연일 계속되는 외교 강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또 아마 여론으로부터 이른바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북아에 있는 각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패권경쟁을 막고 협력과 공생의 질서를 만들고자 적극적 평화의 균형자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외교적인 자세이고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미국이 이 지역에서 대개는 균형자다 이런 것으로 국제정치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한 개념하고 일종의 혼동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명확하게 일치되지 못하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같은 이름으로 오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저는 이 언표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 것이, 노태우 대통령 정부 시절인 1991년 10월 국방부 보고에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질 위주의 군사력 건설방향을 재설정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인 1995년에 당시 세계화추진위원장은 4대 강국에 대해 협상력을 갖고 동북아지역의 균형자로 등장하기 위한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역량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 온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렇게 하나의 화두에 대해서 서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에너지를 모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화두가 나오면 이것을 끊임없이 무한정쟁으로 끌고 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점에서 소모적 논쟁을 접고, 혹 외교부가 이런 점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우리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점과 동북아균형자론에 관련해서 우리 외교안보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동북아균형자론을 둘러싼 많은 오해 중에는 지향과 목표를 좀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 패권경쟁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지향과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균형자론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현할 수단에 대한 무엇이 있느냐는 데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로 강대국들에 비해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많이 달리는데 어떻게 균형자 노릇을 하겠냐고 조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옛날처럼 경제력과 군사력만 얘기하는 시절이 아니라 최근에 동북아에 있어서의 한류열풍 등을 고려한다면 과거처럼 경성권력(hard power) 외에도 외교력, 문화력, 도덕적 힘 등 여러 가지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분히 준비된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동북아균형자론으로 이제 한미동맹이 갈라서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외교당국자들이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균형자론은 적어도 한미동맹이라는 현실적인 토대를 갖추지 아니하고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부당국자들이 누차 설명한 바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런 고투와 고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사상하고 있는 여러 언론들을 비롯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서 우리는 노골적으로 미국과 일본 편을 들지 않고 중국과 북한 편을 들겠다는 이야기냐고 몰아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체적 실현 가능성과 설득력 있는 예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일본교과서 왜곡과 독도문제, 일본의 전반적 우경화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외교적 수단이 있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외교당국자의 노력과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결국 중국을 움직였고, 독일을 움직였고, 또 마침내 미국을 움직였고, 유엔에서는 커피클럽을 통한 다자외교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적어도 일본으로 하여금 이런 방식으로 어물쩍 미국과 손잡는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주도국가가 될 수 없다는 분명한 교훈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위원님께서 대여섯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의 균형자 역할의 현실적인 역량도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외교력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의제설정 능력, 문화적인 힘, 또 우리 외교관들의 능력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충분히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가치도 되고 현실적인 역량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드셨는데 아주 적절한 예를 제시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외교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 그리고 이번에 김숙 북미국장을 보내서 미국 당국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고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인접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과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외교부가 더 치열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김부겸 위원** 최근에 한미동맹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장관님, 동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뜻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면 동맹국가들 사이에는 어지간하게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국익을 양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참아야 되는 것이 동맹에 대한 예의인가요?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동맹국들 사이의 관계는 보통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동맹관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익을 손해보면서까지 하는 것보다 서로 국가의 이익을 존중해 가면서 상호 호혜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위원** 그런 점에서 최근 전쟁예비물자(WRSA)의 폐지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자이툰에 주둔하는 부대의 일부 감축문제는 기본적으로 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협상 당사자 간의 협상의 문제인 것이지요? 소위 말해서 흥정의 문제인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거기에서 마치 미국 측에 대해서 할 말을 하면 동맹에 금이 가는 정도로…… 한미동맹이 그 수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아니고, 방위비 분담이나 WRSA탄 구매 등은 전부 다 우리가 동맹이나 다른 나라와도 얼마든지 협의해 가는 외교협상의 과정입니다.

**○김부겸 위원** 그렇지요. 특히 WRSA 문제는 태국이나 대만의 예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미국의 예산회계제도를 잘 검토해 가면서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깬다는 식은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당국자가 국방당국

자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우리의 국가이익을 지키는 것과 동맹의 가치가 서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른바 '작전계획 5029-05'에 대한 대응이 마치 우리가 미국과 갈라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는지 혹시 장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 문제는 사실 제 소관이라기보다는 한미 군사당국 간에 협의를 해왔고 외교부가 이런 데 대해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전계획 5027이나 5029가 어떤 일부의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한미동맹관계를 흔든다든가 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위원** 외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기밀이나 협상카드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들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미리 국민들의 여론을 돌려놓는 것은 외교 협상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봐야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런 점에서 이런 데 대한 외교부의 애로사항을 국민들에게 밝히십시오. 이것은 우리 국가이익에 관한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마치 1건 더 먼저 폭로하는 것이, 국가기밀을 외국에 더 빨리 알려 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잘못된 풍토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김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범 위원** 장관께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균형자론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오해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표현이 수정되어야 되고 국민들에게 오해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련되지 않은 용어를 써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가 생기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느 쪽에 잘못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표현을 사용한 쪽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물론 정부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가 됐으면 바람직스러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어 선택에 있어서 사용한 사람과 그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부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나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국제정치적인, 외교적인 용어도 그 뜻이 시대가 가면서 바뀌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그러면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그 용어에 대해서 장관이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좀 더 세련되고 정확한 표현을 써야지 표현을 그렇게 써 놓고 '그것은 오해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임채정 위원장, 유선호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성범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외교의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반복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 우리 외교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말하자면 균형성도 상실한 것 같고, 일관성도 잃어버리고 가는 것 같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외교적 수사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용어의 세련성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외교의 중심방향을 보면 대통령이 외교의 총수 맞습니다. 그러나 장관을 왜 둡니까? 실무적으로는 외교부장관이 이 나라의 외교의 총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볼 때 우리 외교가 이념화, 포퓰리즘화 되어 가는 경향을 다분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인상이 왜 나오느냐 하면 정부가 민주화되고 정치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외교가 외교부의 전유물이었던 상황은 지나갔기 때문에 항상 국민과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외교정책, 특히 유엔정책이라든지 대미정책이 전부 다 정부 내에서 정부기관 간에 협의해서 대개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관련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 내의 기관도 있지만 정부 외의 기관과도 많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우선 바깥으로 공개가 되어서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박성범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국민과 더불어 하는 외교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외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외교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단계에 가서는 외교부가 국민의 뜻은 받아들였어도 국제적인 외교관행과 외교방향에 맞는 표현, 동맹도 의식하고 우방도 의식하는 외교 협상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외관계에서 협상력을 가진 외교부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 이미 그 단계는 지나서 외교적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외교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식, 국민의 생각, 민족의 공조를 다 섞어서 외교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외교를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자꾸 공개되는 것이 혹시 정부가 포퓰리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정책 자체는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수행되거나 입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좀더 신경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범 위원** 좋습니다.

어제 통일부장관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전계획 5029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7함대 사령관이 인터뷰한 기사 보셨습니까?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봤습니다.

**○박성범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한국의 뜻과 상관없이 7함대는 한반도를 포함한 수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런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북한 전역에, 물론 구체적으로 병력을 상륙시키겠다든지 연안에 배치하겠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 뉘앙스를 보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7함대 사령관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한미 간에 공조는 잘되어 있고 미국 측도 작전계획 5029의 중단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시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7함대 사령부가 뭐하는 부대인줄 아느냐, 우리는 이런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바로 이런 것이 한미공조에 문제로 노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 기사를 보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현재 7함대 사령관이 얘기한 데 대해서 외교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에 7함대 사령관은 자기의 작전범위를 원칙적인 선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이런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마는 외교부 북미국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변에 원자로 5MW짜리가 가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고장으로 중단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왔고 의도적으로 중단을 했으면 약 8000개의 핵 연료봉을 추출해서 플루토늄을 다시 추가로 생산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에 의하면 10~20㎏ 정도는 추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두 달여 동안의 냉각기를 거쳐서 추출하게 되면 6월～7월경에 핵 보유량이 늘어나는 사태가 오고, 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은 아닙니다마는 관계국과 협의해서 추가조치를 취하겠다, 이를테면 현실적으로 지금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 당국 간에 협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료봉을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 가동을 중단한 것인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고 계속……

**○박성범 위원** 물론 이것이 사고로 중단됐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원자로의 구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로와 달라서 사고 가능성도 많지 않은데 돌연히 이것을 중단하고, 이것에 앞서서 북한 측이 발표한 코뮈니케를 보면 핵무기 제조고를 늘리고 있다는 등의 일련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역시 미국에 대한 협박용인지 실제로 핵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인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우리에게는 걱정되는 일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한미 간에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오늘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의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점, 따라서 바람직하고 대등한 한미동맹 수립을 위한 방안 모색, 또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동북아균형론자론의 긍정성 확립 등에 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서면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쌀협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안 나오셔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것과 관련해서 수석대표로 직접 협상에 참여했던 이재길 대사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길 대사가 직접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니까 장관께서 통상도 엄연히 관장을 하시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권영길 위원** 외교통상부니까 통상을 관장하시고 또 핵심적 사항은 결재까지도 하시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권영길 위원** 정부가 쌀협상을 하면서 왜 국민들을 속였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는 속였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작년 12월 30일 농림부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권영길 위원** 됐습니다. 시간 때문에 설명을……

당연히 정부는 속인 바가 없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속였고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쟁점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분명히 밝혔고 앞으로 국별 협의가 있게 된다……

**○권영길 위원** 정부가 쌀협상을 할 때 협상의 주역은 통상본부에서 맡고 농림부 전문가도 배석을 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다 참여합니다.

**○권영길 위원** 협상의 주된 가이드라인은 농림부가 제시합니까, 아니면 외교통상부에서 제시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하는데 정부 전체적으로 외교부, 농림부, 재정경제부 다 참석합니다.

**○권영길 위원** 그렇지요?

따라서 농림부가 거짓말을 했든 또는 누가 거짓말을 했든 간에 만약 거짓말한 적이 있다면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나 저는……

**○권영길 위원** 장관께서는 정부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가 거짓말 했다

는 예를 하나씩 들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방호 위원이 ‘미국, 중국 등과 큰 틀에서 합의하기 위해 이면합의 또는 쌀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통관절차, 검사기준 완화, 다른 품목의 검사기준 완화 등 부대적인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 ‘쌀 이외의 부가적 합의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쌀 이외의 부가적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WTO 규정에 보면 꼭 쌀 이외의 품목에……

**○권영길 위원** 쌀 이외의 다른 부대적인 양보를 한 것 아니냐고 질의를 했을 때 쌀 이외의 부가적 합의는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부가적 합의가 있었으면 이 말이 거짓말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2월 22일자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의 속기록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권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얘기했습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외교부, 농수산부도 다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결정한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권영길 위원** 그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거든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권영길 위원** 그런데 농림부장관의 답변이든 외교부장관의 답변이든 농림부장관의 보고이든 외교부장관의 보고이든 정부의 답변이고 정부의 보고입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것은 정부의 입장입니다.

**○권영길 위원** 제가 거듭 질의하지만 12월 22일 이방호 위원이 ‘부대적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했는데 ‘쌀 이외의 부가적 합의는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농해수위에서 위원들이 문서 공개를 요구해서 비공개로 열람을 시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권영길 위원** 거기에서 드러났습니다. 한중 간의 서명 날짜는 1월 30일인데 12월 22일에 농림부장관께서도 답변했었고 김달중 농림부기획관리실장도 보고를 하셨거든요. ‘일부 국가들은 농수산물의 검역·검사 완화, 관세 인하 등 자국의 관심사항을 쌀협상과 연계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측은 양자 현안의 성격상 쌀협상과는 분리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 12월 22일자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한중 양자합의의 서명일자는 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보고한 시점에서 이미 쌀 이외의 부가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초에 쌀협상 이외에는 다른 부가합의가 없다고 한 것도 속였고 이 시점에서 보고한 내용도 속인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께서 아까 한미에 관해서 쌀 이외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쌀 이외에도……

이재길 대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DDA협상대사입니다.

**○권영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우선 쌀협상은 9개국과 협상했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예, 그렇습니다.

쌀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었던 것이……

**○권영길 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쌀협상 이외의 부가적 협상은 없고 합의된 바가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실제적으로 협상을 했고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검역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기했습니다. 연말까지 실무 차원에서 대강의 합의는 있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것은 어제 농수산위에서 이미 다 한 것이고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농수산위에서 쌀 이외의 부가적 협상은 없고 합의는 없다고 정부당국자가 답변했는데 실제적으로 협상을 했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12월 30일에 저희들이 WTO에 양허안을 제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합의문안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사인을 한 것은……

**○권영길 위원** 어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서명일자는 1월 30일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12월에 합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길 대사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아닙니다.

**○권영길 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실무 차원에서 대강의 합의는 있었지요.

**○권영길 위원** 그러면 합의를 했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어야지 합의는커녕 협상도 없다고 보고를 한 것은 거짓말 아닌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정은 잘 아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중국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최종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 금년 1월 5일에 WTO에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검토할 권리를 요구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영길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농림부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에 쌀협상 이외의 부가협의가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저는 속기록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만약 외교부든 농림부든 손발이 안 맞다고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문제이지요. 말하자면 국민의 목숨 줄을 쥐고 있는 쌀협상을 하는데 농림부 따로, 외교부 따로 또는 청와대 따로라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이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협상하는 단계에 있어서 당초에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협상 초기부터 최종단계에까지 쌀과 연계한 양자문제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12월 22일에 이야기할 때는 '그때 합의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12월 30일에 발표할 때는 분명히 '부가적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농림부장관이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를 안 한 과정은 4월 12일까지 국별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별 간에 세세하게 쌀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 안 했던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농림부장관께서 지난해 12월 30일에 쌀 이외의 부가적 협상을 했고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앞으로 계속 협의가 있다고 그랬지요.

**○권영길 위원** 자꾸 그렇게……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교부장관도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권영길 위원** 조금 전에 농림부장관께서 지난해 12월 30일에 쌀 이외의 협상도 했고 부가적 합의가 있다고 국민에게 발표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12월 30일에 농림부장관이 발표한 것은 금번 이행계획서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권영길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12월 30일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 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12월 30일에 대국민발표를 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 이후에 농림부장관은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종결하면서 일련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내일 중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27위입니다. 유엔 가입국 175개 중에서 119위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쌀 하나만 남았거든요. 저는 외교부, 정부당국의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 농민들에

게, 국민들에게 분명히 쌀협상만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만일 쌀협상만 가지고 안 된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공개를 해서 마늘처럼 쇠고기, 사과, 배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쌀만 가지고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말장난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내고 공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노무현 대통령의 방독 외교성과의 하나로서 세일즈외교 그리고 북핵 평화외교에 진력하시고 외교부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은 우선 평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과 관련되어서 외교부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정보의 판단의 실체는 어떻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은 정보당국 간에 좀더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최성 위원** 한미 간에 정보 교류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현재 어떤 정보까지 공유가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선 기본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최성 위원** 가동이 중단된 것까지는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정보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좀……

**○최성 위원** 그런데 왜 외교부의 실무당국자는 외교통상위원회에 정식보고가 되기 전에 라디오 토론에서 중단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정보사항에 대해서 확인드리기가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백악관 대변인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안보리 회부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백악관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도 내용을 읽어보면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안보리 절차는 절차로서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든지……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미 간에 그러한 단계에 가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최성 위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금 폐연료봉의 냉각기간이 오히려 북한의 핵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부나 국무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군사행동이나 비밀행동을 취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내용은 상당히 고도의 추측 같은 보도이고 정부 간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최성 위원** 미국의 국가핵안보국의 국장하고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최근 이러한 일련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제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 신중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정부당국자로서는 북한 핵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에 북한이 그러한 발표를 했을 때도 한미 당국 간에 계속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최성 위원** 미국의 네오콘 그룹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볼튼 유엔대사 지명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유엔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라크에 있어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 실패 때문에 이라크전이라는 수렁에 빠진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존 볼튼과 같은 인사가 바로 이런 위험을 저지를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존 볼튼 유엔대사로 내정될 가능성 그리고 그랬을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존 볼튼 미국 유엔대사 내정과 인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미국 내부의 일이고…… 그러나 볼튼 유엔대사 내정자가 인준이 되어서 정식으로 대사가 된다면 이 정부 내에 정책적인 협의과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너무 낙관하시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그리고 종군위안부에 대한 역사 왜곡의 실태를 보면 과연 일본정부의 발언과 주장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의 가짜 유골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타임스에 나와 있는 보도내용에 따르면 가짜 유골이 아니라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당시에 일본에서 사용했던, 가짜 유골을 감정했던 기법이 국제적으로는 대단히 이것이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요. 동시에 타임지에서도 인용을 했고 국제적인 영국의 과학잡지인 네이처에 있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일본정부가 대단히 중요한 인권 문제라든가 과학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두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정보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내용은 저도 네이처라든가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자기들이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런 다음에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정부로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결과를?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나 우리도 정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은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이때 유골감정을 했던 요시히 씨가 일본 경시청에 이례적으로 특채로 임명되고 그것이 일본 내 여러 야당인사들이나 또는 일본 내 언론에 의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내용은 전부 다 보도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

**○최성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의 유골 가짜 감정 논란이 지금 있는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북일관계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일본의 일련의 군국주의의 부활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실제 이 유골감정이 왜곡되었다고 판정된다면?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단 납치 문제라든가 유골 문제 이런 것이 일본에서 국민적인 정서상 상당히 감정적인 정서가 높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정상회의든지 또 외교장관회의 기타 여러 가지 계기 때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일본정부나 국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을 하지만 이러한 것이 일북관계라든지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아주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이번에 노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에 언론에서 4단계 통일방안이라고 해서 상당한 혼선을 불러일으켰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4단계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언론의 주관적인 해석이지 참여정부가 4단계 통일방안으로 그걸 정식화한 건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4단계라고 누가 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단계……

**○최성 위원** 좋습니다.

독도 문제하고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분리대응하겠다 하는 부분이 논란이 있고 이번에 총리께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의 답변이 두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하겠다는 것은 분리대응론이 갖는 위험성·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는 종합적인 대처, 총괄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뿌리가 신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맥락이 갖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분리대응이라는 정부정책을 수정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분리대응과 총괄대응이 다른 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총괄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독도든지 역사왜곡 문제를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분리대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대응할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외교부가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분리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심도 높은 검토를 해 주셔서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의 반일시위가 급증하면서 일본의 안보리 진출 그리고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6자회담 문제하고 북핵 문제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역사왜곡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또 중국 내에서의 반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일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한 핵 문제는 비단 이것이 남북 간이고 또 일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일본에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중국의 입장도 그렇겠지만 북한 핵 문제의 공조체제는 별도로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신국군주의 부활 시도에 대해서 일본 내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연인으로까지 불렸던 친고이즈미 인사인 다나카 전 외상이 "고이즈미는 머리 나쁜 심술꾸러기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오히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해쳤다"는 평가가 있고 또 과거에 부시의 사랑스러운 푸들이라는 평가로 언론의 혹평을 받았던 고이즈미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런 동북아에 있어서의 일본 외교력에 심대한 훼손, 여기에 고이즈미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유선호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성 위원** 예, 답변을 기대한 질의는 아니었고요.

마무리하면서 외교부장관님께 각별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일부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국적 있는 외교를 전개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심대히 훼손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주변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해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은, 대통령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동시에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탈하고 또 암울했던 과거 제국주의 역사를 미화하는 신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당당한 자주외교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야당 위원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외교적인 세련된 표현 또 지혜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종종 저는 여러 통일·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동북아균형자론 또 대통령의 친미적인 국민과 관련된 발언 또 한미동맹의 논의를 할 때 과연 어느 나라의 국회이고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가 하는 자괴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는 저의 기우이고 우려이고 오해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은 다릅니다. 또 당연히 한미공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공유하면서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적 있는 당당한 자주외교 변함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규 위원**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일 간 외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독일의 케이스를 잘 연구해서 세계인들을 설득한다면 우리의 입장 강화와 외교적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조언을 하셨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또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일 외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단호한 원칙적인 대응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외교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외교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북아의 정세가 아시다시피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참여정부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외교방침과 중국의 반일 분위기에 일본정부가 약간 유화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리 전 총리가 한국에 자기 계보의 의원을 보낸다든가, 고이즈미 총리에게 한일관계의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모습이라든가, 마치무라 외무상도 과거 아픔에 대하여 반성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분적인 태도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작은 일본의 변화에 우리가 외교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꾸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략을 만들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북아 주요 국가의 민족주의 경향에 대한 외교전략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급속하게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중국의 중화민족주의가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동북아정세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데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노골화된 중화민족주의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들과의 잠재적 분쟁요인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분쟁의 주요요인을 보면 주로 민족주의와 민족주의를 동반한 종교문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주의와 일본의 우경화가 충돌하면 시온이즘과 이슬람이 충돌하는 중동처럼 동북아정세도 매우 불안하게 되고 우리도 여기에서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민족주의, 중화민족주의,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외교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민족주의 경향이 동북아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질서가 아직도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대통령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가지고 동북아의 통합에 대한 비전을 대통령께서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계속 실현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간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기가 되는 대로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일 외상회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일본 교토에서 개최하고 여러 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정부 자체로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일본은 총리가 때로는 한국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각료들이 과거 역사에 대한 왜곡발언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하기는 매우 곤란하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뿌리를 뽑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상외교 후속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일즈 통상외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정상외교 이후에 각 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잘 수립해서 정상외교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차이나와 인디아를 더한 친디아(Chindia)라는 신조어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만모한 싱 인도 총리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43년간의 중국과 인도의 대립을 끝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인구 13억의 중국과 10억의 인도가 협력할 경우 23억의 거대시장의 탄생과 더불어서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국제무역 환경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도 인도와의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장관과 경제재정장관도 인도를 방문하고 있고, 3월에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대리도 인도를 방문하고 있고, 4월 말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인도

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인도의 시장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도가 소위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 ODA의 24%인 11억 4000만 달러를 인도에 제공하면서 인도에서의 시장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10월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선언과 함께 정부 간 교류협력과 경제분야의 협력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외교부에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작년에 인도를 포함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폴란드 등 12개 국을 정상외교를 하셨는데 주로 자원외교, 경제통상외교에 중점을 두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3월 30일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통령께 후속조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작성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규 위원** 마지막으로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해석문제 때문에 야당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여러 가지 주변 동북아국가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동북아정세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내걸면서 우리 국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일본은 독도문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불안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입각해서 자기가 동북아시아 질서의 균형자를 자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의 외교전략상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균형자를 하겠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결과도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실용주의를 제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에서도 국민들에 대한 많은 설득이 필요하고 개념정리를 분명히 해줌으로써 균형자론에 대한 정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혼란스러운 이 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김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炳國 委員** 장관님을 위시한 외교통상부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대단히 어려운 용어입니다마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라고 해서 네 번째에 보면 외교부 내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다음에 비정부기구에 대한 외교정책 설명 강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외교는 국방보다 더 중요하다,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 더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국가관이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엘리트들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외교시험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혹심한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감상적으로 즉흥적 대응이나 하고 대중인기영합적인 외교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지난번에 외교부에서 계급도 없애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은 어떤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고 바깥에서 외교부를 엘리트라고 보기 때문에……

**○崔炳國 委員** 그러니까 외교부가 중심을 갖지 않고 업무를 할 때 외부에 대해서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아닙니다.

**○崔炳國 委員** 외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교관 한 사람이 1개 사단보다 더 국가안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다시 기권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불참했다가 이번에는 기권을 했는데, 물론 남북관계의 미묘한 상황인식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인권은 국익보다 더 상위개념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아닙니까? 공개총살을 시키는 상황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국민혈세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외교부에서는 지금도 외교적으로 인권문제가 생기면 기권하실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나 국내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인권위원회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부는 실용적인 면에서 현실적……

**○崔炳國 委員** 소위 실질적인 인권이라는 것은 궤변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제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인권을 도운 것이라는 논리인데 못 먹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총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굶주려서 탈출한 사람들을 공개총살시키는 것을 보고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우리는 갖다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리를 전개하려면 다른 논리를 개발하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일련의 외교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6자회담, 북핵문제, 한일관계, 미국과의 군사동맹 문제 등 외교활동을 하시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일련의 활동은 소위 국법상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조약이나 협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장관이 부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련의 외교활동에 대해서 부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법적인 의미에서 필요한 부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외교적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국법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崔炳國 委員** 앞으로 우리나라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든가 한미동맹 관계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주국방, 자주외교를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법행위이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것을 국법행위로……

**○崔炳國 委員** 그러면 머리 속에만 넣어 놓았다가 말만 하고 치워버립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외교정책의 비전이나 철학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적인 틀 속에서 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崔炳國 委員** 그러면 혹시 외교활동 할 때 장관께서 부서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조약안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문서는 제가 항상 부서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균형자론이나 자주국방, 자주외교는 대통령의 철학에 관한……

**○崔炳國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한 대통령의 인기영합주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엄밀한 의미의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이것은 외교정책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비전으로 해서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할 때는 또다시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칩니다.

**○崔炳國 委員**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한미기본동맹협약이나 일본과의 기본조약, 북한과의 6·15공동선언 같은 것은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崔炳國 委員** 거기에 근거를 해서 대통령이 외교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배치되는 활동이나 언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는 반미면 어떠냐라든가 얼굴을 붉히겠다는 식의 이야기라든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기본적인 조약이나 협약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것은 조약이나 법률에 배치된다고 볼 수가 없고 그것은 대통령의 철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崔炳國 委員** 시간이 없어서 지나갑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이 장관께서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외교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 대통령께서 명확한 지침을 주셔서 앞길을 가르쳐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장관의 말에 대해서 일간 어느 신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반 장관의 용비어천가는 만취한 사석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어제는 공보담당관이 대통령이 터키에서 이야기한 데 대해서 외교부에는 친미파가 없다고

하더니, 김숙 북미국장 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북미국장 김숙** 예, 와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반성할 점을 해야 되겠습니다. 통치행위로서 대통령께서 용어를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개념을 설정하셔서 중요한 정책이 만들어지신 것인데 그 용어가 뜻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더 파악해 국민들이 파악하는데 저희 외교부가 할 일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균형자론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정의를 했습니까?

**○외교통상부북미국장 김숙** 균형자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동북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

**○崔炳國 委員** 그것은 어제 저녁에 생각한 것입니까? 여태까지 못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 말 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것입니까, 외교부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것입니까?

**○외교통상부북미국장 김숙** 여태까지 계속 생각을 해 왔던 것입니다.

**○崔炳國 委員**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까?

**○외교통상부북미국장 김숙** 그것은 물어보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崔炳國 委員**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교시 내려오면 ‘위대한 수령 어버이께서’ 운운하는 식으로 흐름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자주외교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장관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일요일에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그것이 실례 아닙니까? 외국에도 이렇게 일개 장관이 국가원수를 예방하는데 일요일 오후에 오고 그럽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崔炳國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대통령께서 일왕, 천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왕’하고 ‘천황’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일왕 초청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유효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유효합니다.

**○崔炳國 委員** 이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괜찮다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리고 근래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초청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좋겠다고 하고 또 메가와티도 방북하고 난 뒤에 김정일의 서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이미 청와대대변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신문에 보도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 서울에 오겠다’ 이런 것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崔炳國 委員** 알겠습니다.

옛날 가쓰라·태프트조약 기억하고 계시지요. 소위 한반도는 일본의 종속적인 지배하에 둔다는 그런 조약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 당시보다 대단히 힘이 큰 나라라고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통일은 된 나라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남북한으로 분단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반미면 어떠냐, 반일이면 어떠냐 하는 형식으로 하다가 제2의 가쓰라·태프트조약 같은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우선 국제질서가 다르고 다음에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이 훨씬 다릅니다.

**○崔炳國 委員**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만날 당한다는 말입니다. 만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데…… 병자호란 때 명분 찾다가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똑같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최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한마디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통외통위원회에서 나오는 대정부질의의 많은 부분이 용어와 개념의 혼돈 또는 미분화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때도 그런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최병국 위원님이 엘리트주의를 비판하시면서 엘리트를 말씀하셨는데 엘리트와 엘리트주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분

해서 분명히 해 주시지 않으면 외교부는 엘리트주의 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정** 말씀하세요.

**○권영길 위원** 지난번 본회의 대정부질문 때 이태식 외무차관의 답변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 그때 장관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장관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일본 측의 장관인지 한국의 외교장관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점심 때 여러 의원들이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해서 민주노동당은 외교부차관에 대한 해임성명까지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교부차관이 안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장관께 여쭸습니다마는 어제 농해수위가 있었고 어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외교통상위에서 쌀협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해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질의자가 저 외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만을 통해서 질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일반국민들은, 농민들은 정부가 쌀협상을 하면서 농민들을,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이고 어제 농해수위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되었고, 위원들이 정부와 상대국과의 협상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었고, 비공개로 열람이 된 이후에도 정부가 속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의 실무협상을 맡았던 통상본부장이 당연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외교부차관께서는 오늘 참석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지난번 발언에 대한 공적인 사과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았던 것이고 통상본부장도 와서 실제 협상대표로서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두 분 다 오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WTO관계로 해서 제네바에 출장 중이고 이태식 차관은 베트남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수행차 오늘 아침에 출국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장관님, 대통령 모시고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북한 핵 문제 최근에 다시 좀 긴박해지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3월 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핵 보유를 정당화하면서 6자회담이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이화영 위원** 이렇게 북측이 말하는 군축회담의 구체적 내용을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직 북한이 6자회담에서 군축 문제를 협의해야 된다고 주장한 정확한 의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방국들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 측의 입장 같은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라든지 의도가 좀 불분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 이런 걸 기정사실화하려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또 미국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방식과 같이 핵무기 폐기에 따른 보상과 국제적 안전보장 같은 것을 미국이 먼저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얘기한 것으로 우리는 파악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렇게 되면 6자회담의 의제가 앞으로 상당히 본질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로서는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북한의 주장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가 6자회담의 틀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해서 6자회담에 참여하는 다른 다섯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화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이 계속 6자회담에 불참하면 북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겠다 그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정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까요, 어떤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걸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한 절차가 있는 것을 리마인드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화영 위원** 만약에 이렇게 유엔안보리에 북핵 문제가 상정될 경우에 대한 어떤 대응책 같은 거 우리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대응책에 대해서 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6자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6자회담의 조속한 속개 이것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화영 위원** 조나단 그리너트 미 7함대 사령관이 우리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미군잡지 성조지에 "북한정권 붕괴나 북한사회 내부에 중대사태가 발생하면 미군이 투입되어 질서회복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주권침해성 발언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작계5029와 관련되어서 한미 간에 그런 협의를 했는데 7함대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관한 얘기만 할 수 있지 어떤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마 일반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진 작전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한미 정책당국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화영 위원** 최근에 미국 측 관련자들의 발언이 좀 강경기조로 가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미국 내에는 아주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리고 6자회담이 계속 열리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좌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여러 나라가 다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특히 최근에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시비도 있는데 외교부장관님께서는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정의를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동북아에서의 균형자 역할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북아질서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에 완전한 화해나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고 또 과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구라파에서 진행되고 있는 EU의 통합과정 같은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동북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균형, 발전, 공동의 번영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상당한 경제적 또 정치적인 국가적 위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러한 가치지향적인 면에 있어서 조화로운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 가치지향적 측면에서 과거 우리 외교가 냉전시기에는 반공의 관점에서 대륙국가들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균형자론이 나오게 된 배경도 해양국가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과의 기본적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게 설정을 하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대륙국가들과의 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균형적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동북아균형자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가는 비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해 나간다는 것이지 특정한 대륙국가나 해양국가를 분리해서 어느 한편에 선다든지 또는 어느 한편이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갈등과 대

립의 요소가 항상 있으니까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화영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 외교가 미국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장관님이 작년에 갔다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총영사관도 두 군데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우리 외교역량의 배치가 상당히 비중이 낮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외교역량도 균형적으로 잘 배치되어야 한다는 면으로 해석을 하셔서 외교부가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마찬가지 맥락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극동 러시아와 연해주 쪽을 방문해 보니까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계획도 러시아가 거의 확정을 지었고, 가스관 건립계획도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또 사할린에서는 본격적으로 원유와 가스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극동 러시아 일원의 SOC 건설이라든지 터미널 건설,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협력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연해주지사 다르킨을 만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최근에 연해주와 극동 러시아 일원에서 한·러 경제협력사업이 많이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의 어플라이가 너무 없다, 자기들과 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는 제안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 기업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러시아와 관련된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좀 더 활발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작년에 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셨는데 러시아와는 북핵문제 협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치·외교·안보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원외교 측면에서 특히 러시아의 시베리아 유전과 가스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정책과 자원·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관계를 위한 많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극동 시베리아 가스관·송유관 건설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입장이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장관님께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사할린 쪽에 우리 총영사관 분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할린 쪽에서 한 20년 전부터 시작된 유전개발 프로젝트가 이제 성사단계에 있어서 기름과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협력해야 할 단위가 필요하고, 우리 동포도 많은데 사할린에 우리 정부기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같은 경우도 직원이 8명이 있는데 그 수로는 폭증하는 자원외교 수요에 맞춰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자원 부분에 대한 협력사업이 많다면 산자부에라도 파견을 요청해서 그쪽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역량부터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지와 상의를 하시고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사할린의 송유관 프로젝트도 완성단계에 있고 가스관 부분도 러시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지금 같은 식으로 계속 가면 대응이 또 한참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작년에 한·러 정상회담하면서 러시아에 총영사관을 두 군데 세우는 것으로 공동성명에서 발표해서 아직까지 국내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사할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앞으로 임금 노동자로 가 있었던 사할린 동포들이 일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배상권 청구도 하게 될 것 같고,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도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이 하고 있는데 현지와 연결이 안 되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이번에 외국에 다니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온종일 균형자론에 대한 얘기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북아의 세력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한 데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라는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고, 맹방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국을 우리 우방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카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동맹을 기초로 해서……

**○정의화 위원** 애초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의화 위원**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한미동맹을 기조로 해서 그렇게 간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것을 들어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제가 그럴진대 일반 국민들도 다 그런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를 통해서 장관님 말씀을 듣고 그런 오해가 풀리기를 바라는데 제가 봐서는 여전히 대통령께서 말을 먼저 쉽게 해 버리고 그 뒤에 테크노 롸이트가 받쳐 주려 하고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시켜 나가려 한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동북아의 세력 판도를 바꿀 수 있겠느냐는 점인데, 사실 균형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야말로 우선 힘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변 나라에서 우리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 두 조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시쳇말로 한다면 건방을 떠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것이 주변 맹방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켜서 3만 불대 이상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지금 11등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선진국이 되고 우리의 홍익정신이라든지, 토인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충효사상이나 경로사상 같은 정신문화가 세계의 중심이 됨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본다면 저는 말이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국익에 오히려 손해가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사실 시중의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외국의 전문가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국내 문제건 국제 문제건 더구나 외교적인 문제에서 말을 줄일 필요가 있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고 상당히 가벼운 인상을 줌으로 인해서 통치권자로서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말씀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자라는 표현을 빌리기보다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싸여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조정자 역할을 한다든지, 균형이라는 표현보다는 화합해 나가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장관께서 말하는 실용적 외교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보고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균형발전이라고 해 놓고 실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협의한다, 회담한다는 얘기만 있는데 중국이 소위 도강양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외교정책은 특히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기왕의 동맹은 더 강화해 가고 중국을 위시한 전 세계와 우호를 증진해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그 원칙을 항상 앞세워야 할 것 아니냐,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손상시켜 가면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그것은 인간관계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고구려사왜곡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북공정의 실태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로서의 대처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또 NSC 차원에서도 북한에 남아 있는 고구려의 역사, 문화유적 그리고 북한 학자

들이 그동안 연구한 내용들도 우리와 북한의 인민회의, 북한 학자와 우리 학자들이 평양에 가서 함께 볼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다' 등등의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높은 차원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셔널 아틀라스 제작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된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책 마련을 위해 외교통상부에서 제일 먼저 저와 의논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국토지리정보원과 대한지리학회에서 제 방에 여러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억 정도면 우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정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위원** 그동안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던 동북아균형자론과 관련해서 오늘 질의과정을 통해서 많이 정리가 되었고 균형자론의 추구 방향도 많이 제시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가장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는 외세의 침략을 당한 경험은 있지만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전례도 없고 우리 스스로 동북아의 패권을 추구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를 추구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적합하다, 또 실제로 유럽에서 스위스와 같은 작은 나라도 지혜롭게 주변국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세중립국으로서 정착하는 데 성공한 전례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미국이 유럽에서 NATO를 중심으로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듯이 미국이 동북아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편향되어서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봉쇄정책이나 대립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다자안보체제를 지향할 때만이 우리의 균형자론도 실제적으로 의미를 갖고 성공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국회,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우리의 외교력도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의제를 설정해 나가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느 나라를 침범했던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덕적·역사적 정통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굳건히 있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항상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선호 위원** 북한이 영변에 있는 5MW짜리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북한이 현재까지 구축해 놓은 핵시설을 현 단계에서 일단 동결하고 더 이상의 진전을 막는 데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일정 정도의 에너지 등 보상적 지원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안의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중단해서 폐기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 우리가 잠정적인 차원의 안보도 제공하고 또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정하게 조율된 로드맵에 따라서 아주 궁극적인, 완전한 폐기까지 가면 우리가 대규모 경제 지원, 국제사회 참여, 또 다자 차원에서의 완벽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호 위원** 4월 12일에 이른바 WTO의 이행

계획서 수정안 인증결과가 공개됨으로써 그동안 농민들, 또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새롭게 많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행계획서 별도 합의사항을 이면합의로 볼 수 없고 쌀협상과 연결된 것도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도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수입위험평가 개시가 붙어 있다든지 또 보도과정에서의 미적지근한 태도 이런 점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설명을 좀더 확실하게 하고 투명하게 발표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유감을 표명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정부로서는 협상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때에 농민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대화를 했고 농림부장관이 12월 30일에 발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향후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농민단체나 일부 국민들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혹시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더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호 위원** 지금 농민문제는 농민 아닌 분들이 연대해서 농민들을 보호해야 될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두면 결국 십수 년 이후에는 농촌은 거의 폐허로 변할 것입니다.

쌀협상 문제도 그렇고 FTA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농민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려는 대책을 결단하고 그러한 자세를 가져갈 때 이러한 오해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때 현재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보다는 농업기반이 잘 되어 있는 일본도 농수산물을 50%만 개방하겠다는 정도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의 1년 성과에 대해서도 물론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마는 작년 한 해 농산물에 대한 단기손해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한·칠레 FTA에 따라 실제 작년 한 해 전면 개방된 품목이 20여 개 품목으로 전체 1080여 품목 중의 일부로 이후에 쌀, 사과, 배를 제외한 전 품목이 개방된다면 피해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농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뒤늦게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한 경험을 생각할 때 앞으로 FTA 추진에 있어서 국민적인 합의과정과 철저한 대응책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필요하고 또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대국에 대한 철저한 산업별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것을 공개하고 미리 대책을 세우고 또 후 협상에 입각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 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피해 산업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잘 알고서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더욱더 민감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피해계층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다루기 위해서 대외경제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항상 검토를 하고 있고 또 FTA를 추진할 때는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도 개최해서 국민들하고 호흡을 맞추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지지기반을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기구분담금 체납액이 2004년 말 8100만 불, 2005년에 약 1억 1000만 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3년 1063만 불에서 계속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의 유엔분담금 순위가 11위로 대폭 상승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유엔헌장 19조에 의하면 '유엔에 대한 분담금 지불을 2년 이상 연체한 회원국에 대해서 총회에서의 투표권을 박탈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정규 또는 PKO 예산분담금, 기타 의무분담금 증가가 2006년 이후에 국제기구분담금 자연증가율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OECD 회원국이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면서 국제기구분담금을 내년 기준으로 1억 1800만 불 이상 체납하는 것은 국가적인 위신이 상당히 손상되고 있고 우리의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내후년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라든지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이런 데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당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

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당국도 국가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체납액을 차년도 예산에 일괄 반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매년 평균 25%씩이라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분담률하고 국제기구에서의 예산증가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때까지 해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에 관계 장관과 여러 가지 간담회도 있으니까 그때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유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 오전에 장관님께서 답변을 죽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가 여러 가지 자료도 안 주고, 존경하는 정의용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전문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 위원회가 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진지한 지적과 수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교·안보·국방의 전문가들조차 친미파, 친일파로 몰릴까 두려워 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외교·안보·국방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너무나 위험한 방향으로 어긋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병이 죽창을 드는 심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을 비판합니다.

첫째, 폐쇄적 민족주의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는 북한의 주체사상은 민족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세계 최악의 아사국가, 세습독재국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민족의 자존은 고사하고 세계 최불량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미종속외교, 대미종속경제, 친일·친미파정권 등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거쳐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방과 수출,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오늘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남과 북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둘째, 포퓰리즘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국내용 인기 위주, 득표 수단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선동하면 국내정치에서는 재미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셋째, 널뛰기 외교는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침저녁으로 말씀이 달라집니다. 찾아가는 나라마다 말씀이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임기응변은 그때그때마다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은 믿음을 주지 못하여 사면초가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넷째, 동북아균형자론은 비현실적 이상주의적 구상입니다.

우리가 동북아 중심국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북아 균형자도 될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원래 외교적 용어로 '균형자(balancer)'란 주변의 나라들을 활용하여 균형을 이루는 강대국을 말합니다. 동북아에서의 균형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냉전시대에 닉슨-키신저가 중국과 소련, 일본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해서 이 지역 평화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 하다가는 자칫 한미동맹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냉혹한 힘의 세계입니다. 구호와 이론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균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구호보다 국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문제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NSC는 상임위원장이 통일부장관입니다.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길러온 외교·안보 전문가는 모두 소외되어 대통령께 보고조차 직접 드리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외교안보위원회 보고자료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정

상외교의 기획, 추진 등 대통령의 대외활동 보좌, 대통령 군 통수권 행사 보좌, 외교안보 통일관련 부처의 주요 정기보고를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 다 외교안보위원회가 합니다. NSC가 합니다. "국가위기관리체계 종합 기획, 조정,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각종 회의체 운영" 등 모두 NSC 사무차장이 실제로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외교·안보 아마추어인데 NSC조차 전문가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외교·안보 분야는 더욱 불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장관님 여러 가지 구구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걱정입니다. 저 같이 외교 모르는 사람도 다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러시는지,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은 제가 오전에 다 들었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다 아시면서……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김문수 위원** 됐습니다. 제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오전 내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말장난 하는 데도 아닙니다. 장관님이 자기 보신을 위해서 장관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라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외교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러나 모든 국민들 눈에 다 보이는데 왜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우리 정부가 기권을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김문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1개 나라가 더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우리 동족의 인권에 대해서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논하는 데 대해서 기권을 하기까지는 NSC에서 논의가 되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 문제에 대해서는 NSC에서 궁극적으로는 협의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느냐 해서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권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문수 위원** 외교부의 내부의견서를 청와대에 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내부의견 자체가 기권을 권고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우리가 기권을 권고했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렇게 기권함으로써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문제를 잘 다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결의문 안에 북한이 계속 이렇게 가면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권을 했더라도 기권투표를 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인권이라는 것이 인류 보편적 타당한 가치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것을 준수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임채정 위원장, 유선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문수 위원**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왜 기권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찬성한 30개 나라는 다 북한이 망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고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는 것을 거쳤고 지금 분단이 된 지 55년 이상 되도록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반도에서 안전 보장, 민족 화해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엔 사무총장이 3월 21일 유엔에 제출한 60차 총회 준비보고서에 인권이사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유엔인권위원회가 아니라 유엔에서 인권이사회 자체를 신설하자 이래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는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인권에 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서 유엔 자체에서 인권이사회를 신설할 정도로까지 국제사회가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이 정부는 자신의 동족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제무대에서 인권 선진국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인권

선진국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관님,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국으로 되어 있는 것에는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선진국인데 동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됩니까? 저는 장관님보다 외국에 많이 안 나가 보지만 나갈 때마다 외국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당신 동족의 인권에 대해서는 피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냐?'라고 물을 때 제가 아무리 답변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국내에는 이러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해 봐야, 인권의 특수성을 이야기해서 세계적으로 통하면 인권 이야기를 왜 유엔에서 합니까? 특수성에 따라서 개별 국가에 맡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유엔협회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13일에 조사한 유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올해 4월 15일에 발표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봤습니다.

**○김문수 위원** 여기에 보면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 77.6%가 찬성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김문수 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는 20%밖에 안 됩니다. 국민들 여론하고도 달라요. 그런 엉뚱한 궤변을 계속 내세우고, 물론 장관님 처한 태도는 압니다마는 정말 걱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안충학 씨라고 탈북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벌써 10년 전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올해 2월 4일에 중국 연길공항에서 체포되어서 지금 연길간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김문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두 달 16일째 되는데 가족이 아직 면회를 한 번도 못 한 것은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안충학 씨에 대해서는 2월 22일 우리 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면담을 하고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공안국 측도 최대한 관대히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사람이 구속이 되어서, 그것도 불법적으로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었는데 그것도 가족이 신고하기 전에 외교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 중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통보를 안 해 주니까. 웃기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자국민이 구속되어서 두 달 16일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면회를 못 한 것은 사실이지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이 구속되어도…… 가족 면회가 두 달 16일간 허락이 안 된다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사가 두 번 면회를 했고 최대한도로 선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국 측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면회 안 된 거, 이런 게 일본국민이나 미국국민 같으면 이런 게 중국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전 묻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중국정부가 비단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런 입장을 취한 게 아니고……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미국인과 일본인도 똑같냐 이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비슷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문수 위원** 안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 같으면 벌써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통보를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이 사람의 죄상에 대해서 알아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하여튼 중국 측하고, 연길시 당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재판진행 중인 상황이라 면회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또 알아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무슨 재판이 진행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국민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김동식 목사 건도

중국에서 납치되었는데 중국정부 당국으로부터 무슨 진전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도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외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균형자는 고사하고 자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과 기본권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이 면회할 수 있도록은 해 주어야지 그것도 못 하면서 무슨 균형자를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게 외국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위원** 우선 반기문 장관님을 비롯해서 외교부 전 직원들이 열악한 외교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정상외교를 뒷받침하고 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또 한미동맹 관계의 관리,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산적한 외교현안을 잘 처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외교부에 대한 이런 비판은 우리 외교부 직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믿음, 기대의 반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가일층 분발하셔서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균형자 역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장관께서 설명하신 균형자 역할의 개념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의 세력균형 차원에서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동북아에서의 평화촉진을 위한 균형자로서의 새로운 개념이다라는 말씀과 또 용어도 사실 진화를 한다라는 장관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논하는 과정에서 동맹을 논할 때, 균형자 역할에 대해서는 과거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하면서 동맹관계에 대한 개념은 과거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종의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부의 많은 분들이 "동맹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일응 이해가 갑니다. 또 그러한 평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19세기적 또는 20세기 냉전시대의 동맹관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인류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단기적인 국익달성을 위한 외교적 수단 여기에다만 동맹의 기준을 두어서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것이 동맹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주는 행동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맹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하고 공동의 가치를 나눌 수 없는 나라하고는 사실 동맹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측면에서 인류보편적 가치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좀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대외정책에 신뢰도도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선 동맹과 관련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동맹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50년간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던 개념이 많았는데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동맹관계가 아주 역사적이고 중요한 전환기를 거쳐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환기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만들자 이것이 노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비전으로 제시를 한 과제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동맹의 이러한 것이 어떨 때는 우려도 나오고 걱정

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지금 동맹관계가 발전되고 있고 상호 윈윈하는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권 문제는 김문수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우리가 숙명적으로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북한과 화해를 하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민족화해를 도모하고 동질성을 도모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고심에 찬 논의 끝에 기권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중잣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북한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런 걸 계속 촉구해 가면서 또 우리 정부 입장을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용 위원** 다음은 김숙 북미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 국장님 좀 나오시지요.

최근에 미국에 다녀오셨지요?

**○외교통상부북미국장 김숙** 예.

**○정의용 위원** 주요 목적이 뭐였나요?

**○외교통상부북미국장 김숙** 미측의 정부, 의회 그리고 한반도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서 한미동맹관계 현황을 논의하고 한미 간의 현안에 관해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그런 목적으로 갔었습니다.

**○정의용 위원** 미국 고위당국자들을 만날 때 균형자 역할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북미국장 김숙**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정의용 위원** 미측의 반응이 대개 어땠습니까?

**○외교통상부북미국장 김숙** 정부 측 또 의회 측 인사들은 저의 설명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정의용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가 볼 때 김 국장이 워싱턴에 계실 때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학자 출신의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동북아균형자론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충고했다, 하나는 한국이 19세기 말 조선이 범한 전략적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둘째는 20세기 초 폴란드가 지역세력으로 과도하게 자신의 힘을 부각시키며 겪게 된 문제도 동시에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북미국장 김숙** 그 당시의 면담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제가 좀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균형자론을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가치중립적이 아니고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우리 균형자론을 추구해 나가겠다 하는 비전과 전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하고 동의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관리의 입장이 아니고 자기가 관심 있는 학자로서의 얘기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은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나 능력을 충분히 감안해서 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톤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정의용 위원** 다음은 이재길 다자협상담당대사 나오시지요.

쌀협상에 있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주로 협상을 많이 주도하셨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예, 그렇습니다.

**○정의용 위원** 쌀협상이 작년 12월에 실질적으로 끝이 났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예, 이행계획서에 대한 합의는 되었습니다.

**○정의용 위원** 그다음에 WTO에서 우리 쌀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개별협상을 1월에 대충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개별협상은 전반적인 협상을 하면서 작년 내내 진행했는데 양자 차원의 부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1월까지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정의용 위원** 그런데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협상 내용 자체를 전부 다 공개는 못 했지만 우리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부분의 부담을 더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농민단체나 정부기관, 다른 NGO들과 협의한 것 아닌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7일에도 저희들이 농민단체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의용 위원**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 특히 정

치권에서도 정부가 이면합의를 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비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쌀협상에서는 가능하면 투명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도 설명회를 가졌고, 12월 30일 농림부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쌀협상결과를 WTO에 통보를 하면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양자 차원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 쟁점별로 문서 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용 위원** 아까 장관께서 보고하실 때 4월 12일에 WTO사무국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했는데 인증서를 발급받고 난 다음에 사실상 그 내용을 우리가 전부 공개했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예, 그렇습니다.

**○정의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제관례에 맞는 것인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대부분의 외교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 쌀협상의 경우는 국민의 알권리, 농어민에 대해서도 투명성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정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본 관계에 대해 장관께 하나만 더 제 소견 겸 질의하겠습니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조용한 외교를 탈피한다고 사실상 선언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독도문제를 영토분쟁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일본 측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독도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것은 워낙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이것이 국제분쟁화하는 데 우리가 말려든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조용한 외교로 했고 필요한 경우 우리 입장을 강하게 반박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도 반영하고, 일본이 계속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해 오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부득이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다음은 박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啓東 委員** 요새 우리 외교통상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일본 우익정치인들의 독도발언이나 망언이 나올 때마다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를 강조해 오셨고 그래서 조용한 외교를 주장해 오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을 조용한 외교라고 완전히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朴啓東 委員** 속기록에도 장관께서 조용한 외교론을 이야기한 것이 몇 차례나 되던데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 문제는 가급적 일본의 이러한 기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朴啓東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용한 외교론을 그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朴啓東 委員** 조용한 외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253회 본회의 5차 회의에서 차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부가 대일외교를 조용한 외교라고 부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명명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용한 외교로 제목을 달았다든지 한 적은 없습니다. 일부 조용한 외교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朴啓東 委員** 그러한 말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 장관님도 여러 차례 사용하셨고 속기록에도 있어요. 249회국회 속기록에 보면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노현송 의원이 질의하는데 '우리는 조용한 외교라는 말은 써본 일도 없다'는 말을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정말 주의, 경고감입니다. 국회에 와서 의원들 발언하는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답변을 모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노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소위 동북아균형자론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정동영 장관께서는 노무현 독트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독트린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외교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유선호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꼭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독트린이라는 것은 중요한 외교정책을 설정해서 발표하는데 꼭 변화할 때만 독트린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朴啓東 委員** 변화도 없는데 요란하게 독트린이라고 붙여 가면서 얘기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중요한 정책은 독트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朴啓東 委員** 어떤 중요한 정책이요? 그당시의 동북아균형자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꼭 특정한 경우에만 독트린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동북아균형자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朴啓東 委員**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독트린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독트린이라는 말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 관행의 변화, 방침이나……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 말씀은 꼭 변화를 하기 위해서 독트린이 아니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진행해 왔던……

**○朴啓東 委員** 그러면 노무현 독트린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지요. 그 전 김대중 대통령도 해 왔고 김영삼 대통령 때 해 왔던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독트린이라는 말을 왜 붙입니까? 특별히 나아질 것도 없는데 노무현 독트린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정책보다는, 독트린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붙였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朴啓東 委員**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바꿉시다. 언제까지 한·미·일 3각동맹의 틀에 갇혀 있을 수 없다, 북방 3각동맹과 균형을 이루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미·일 3각동맹에만 굳혀져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변화, 즉 북방 3각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은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독트린의 핵심이 이렇게 명확한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책 변화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한·미·일 간에 상당히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져왔고 또 한·미·일 고위급 협의체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朴啓東 委員** 기존의 한·미·일 관계도 유지하되, 그 기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오전 내내 말씀하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한·미·일 3각동맹이라는 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과는 동맹관계도 아닙니다.

**○朴啓東 委員** 이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된 내용이라니까요. 언제까지 한·미·일 3각동맹의 틀에 갇혀 있을 수 없다, 북방 3각동맹과 그 균형의 틀을 이루겠다는 것을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도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워딩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한·미·일 3각동맹이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3각동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啓東 委員**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장관께서 대통령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되겠어요?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취지는 잘못되었다는 취지와도 비슷하네요. 어떻습니까? 장관께서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대통령께서 3각동맹이라는 말씀을……

**○朴啓東 委員** 사용하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어느 때에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朴啓東 委員** 만약 대통령께서 3각동맹이라는 말을 쓰셨다면 장관께서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각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따진다면 한미 간에 동맹……

**○朴啓東 委員**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만약 한·미·일 3각동맹의 틀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으면 3각동맹의 틀이라는 사용도 부적절했

을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내용은 제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朴啓東 委員** 확인해서 답이 달라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한·미·일 3각동맹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표현되었다면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느냐는 것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 좀더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朴啓東 委員** 대통령 말씀과 장관 말씀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3월 25일에 반 장관께서는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조찬강연회에서 정부에서 누가 그런 말을 쓴 일이 없다, 북방 3각동맹, 남방 3각동맹은 불필요한 해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는 남방 3각동맹이라든지 북방 3각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미 간에 동맹이 있고 미·일 간에 동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간은 동맹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도적으로 3각동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朴啓東 委員**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분명히 두 분 다 각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위치가 청와대나 NSC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 때문에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책능력이 부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권위와 세는 점점 커지고 세지는 반면에 외교통상부가 마치 외무사무국 노릇이나 하고 있는 외교통상부가 되어 버리고 주요 외교정책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은 어디 가 있는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비전문가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외교정책은 우리 국민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대외적으로도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박정희 시대에 중앙정보부가 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그 이후로도 청와대 비선조직에 의해서 외교정책이 좌지우지하는, 외교통상부 자체의 사기도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영관 장관도 NSC의 자국 외교론자들에 의해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미리 납작 엎드리기로 나가서 외교부 역량이 미치지 못할 때 대통령께서 명쾌한 힘을 주셔서 정말 앞길을 가르쳐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는 둥, 전통적인 외교관료 출신이나 외교계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런 정도로 엎드리기 하는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문제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박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한나라당 소속 이성권 위원입니다.

먼저 대통령을 수행해서 외국 순방 갔다 오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국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개인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결정 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 정부를 보면 개인위주, 개인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외교정책이 결정나는 양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정책결정 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예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외국에 가서 발언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에서 한 것인지 진의를 확인을 하고 싶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직접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터키에 가셔서 동포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 중에서 미국 사람들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걱정스럽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했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미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면 국내적으로 많은 혼란과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친미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때 계셨던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한미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반자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익에 입각한 확고하고 주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나쁜 의미보다는 한미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의 국익이나 사정보다는 미국 측의 입장에 서서 너무 그쪽만 두둔하고 우리 입장은 잘못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 우리 외교를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성권 위원** 두 번째 질의, 실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제가 이해를 안 했고, 최근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비전에 대해서 비판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정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성권 위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사람들이라는 것에 실무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친미적 사고를 가진 실무자가 존재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려스럽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반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점을 외교부장관께서 대통령한테 수시로 건의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친미적'이라는 발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가치론적으로 틀렸다라고 일단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뭐가 친미적이고 뭐가 나쁘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막 던져 놓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냉전시대의 대한민국 내에서 친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하듯 탄압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대적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관점에서 친미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하게 되면 나름대로 친미가 아니고 용미라든지 합리적인 관점에서 미국을 다루려고 하는 세력들조차도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쁜 의미로 취급될 소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어법상으로 보면 국내정치에서도 이분법적인 발언을 많이 하십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과 강북에 사는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외교정책에도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국내에 미치는 파장은 국내에서 그칠 수 있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큰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로 북한이 18.4%, 미국이 29.5%, 일본은 29.2%입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45.7%가 미국이 가장 위협적이고 학생의 50.1%가 미국을 위협적인 국가로 선택했습니다.

장관님이나 대통령이나 정부의 관계자들은 대부분 한미동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국민들의 감정은 반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감정과 정부의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정책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왜 발생했습니까?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이런 것에 더 보탬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는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물론 여론조사를 100% 다 신뢰해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성권 위원**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더 확대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은, 계량적으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하실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반미감정이라는 것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초에 미국과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민주의식이나 자아의식 또 우리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미국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지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미감정은 한미 간에 공동으로 노력을 하면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 반미감정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서는 장관님과 제가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경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데 미국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반미감정도 자꾸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미 간에 지난 15년간, 20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그 당시에 군사정부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하고도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과정에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안보현안들이 노 대통령 지난 2년 1, 2개월 사이에 거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기존의 냉전시대의 질서가 현재 동북아 내에서는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은 중일 간의 패권경쟁 내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동북아 평화번영이라든지 동북아균형자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과 카드 그리고 대국민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 힘 있는 전략 이런 것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 큰 목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해 표기문제와 관련해서 '동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만든 말이니만큼 국내 지도에 '한국해'로 표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동해 명칭 표기라는 항목을 가지고 동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동해'가 아니고 '한국해'로 표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인지, 내부 조정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총리의 일시적인 답변인지, 일시적인 답변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EAST SEA'는 우리가 92년부터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와서 이것이 'SEA OF JAPAN'이나 'EAST SEA'로 병기되거나 아니면 'EAST SEA'가 단독으로 표기되거나 이런 면에서 많이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확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님께서 그렇게 국회에서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난 13년간 '동해'로 계속 우리가 국제사회에 주장해 왔고 또 이것이 많이 수용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이런 것이 좋겠다든가 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 맞습니다.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데 어쨌든 '동해'로 이제까지 집중해 왔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국무총리가 '한국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름을 하나로 통일해야만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 논의 없이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 혼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진지한 검토와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오늘 회의에서 계속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장관께서 여러 가

지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대학에서부터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국제정치를 계속 공부해 왔던 사람인데 정부가 얘기하는 균형자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안 와 닿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에서 상당한 국력을 갖춘 준강대국으로서 세력균형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4강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약소한 국가로서 일정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외교의 수장이신 장관께서 우리가 말하는 균형자의 형태라 함은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국력이나 이런 것에 입각해서 강대국이라든지 인접국가와의 관계를 물리력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동북아사회에서……

**○정문헌 위원** 그렇다면 균형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한반도의 주변열강 사이에서 자주외교를 펼치고,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 다자외교가 정착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고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승인해야 되고 인정해야 비로소 균형자역할이 시작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주변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세력이나 물리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익의 고삐를 쥐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들이 인정할 것이고 내지는 우리가 어디로 편승함으로써 현재 동북아의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헤게모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균형자로 인정이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의 국력이나 위상 이런 것을 너무 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1개국이지만 우리가 유엔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도 상당합니다.

**○정문헌 위원** 우리 주변 4강 놓고, 남북한 놓고 동북아 정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지역이 상호 의존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힘도 다 필요한 것으로……

**○정문헌 위원** 아까 장관께서 다 하신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김 북미국장께서 미국에 가셔서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관리 다 만나보셔서 우리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어로 어떤 표현을 쓰셨습니까? ‘balancer’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mediator’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북미국장 김숙** ‘balancer’ 또는 ‘Balancing Role’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문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외교는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라는 것은 개념이고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자’라는 말을 자꾸 던지면 그 말 자체에서 상대방이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군사·경제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무리하게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려면 주변국가들의 오해는 물론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는 것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중국에서 많이 쓰는 ‘도강양해’라는 말의 의미를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쌀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공개된 WTO 쌀 인증 결과를 보면 당초 통상교섭본부가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축소와 이면합의 의혹을 자초한 결과를 낳았고 향후 국회 비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 8일 통상교섭본부가 우리 통외통위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어제 밝혀진 것과 달리 인도나 이집트에서 쌀 11만 1210t 구매하는 사실과 아르헨티나 중국 캐나다에 대해서 농축산물 수입장벽 완화하고 관세율 인하한다는 얘기는 아예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보고 안 하신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재길 대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저희가 사실은 4월 12일 WTO 사무총장으로

부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보고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문헌 위원** 그런데 그때 보고할 때 9개국 협상 참여의사 표명, 그리고 중국은 몇t, 미국은 몇t 이렇게 죽 나오는데 왜 버금가는 나라에 있는 것은 보고를 안 하신 것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저희들이 축소보고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경과, 그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4월 12일 WTO 사무총장으로부터 인증서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문헌 위원** 차후 문제가 생길 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의사를 밝힌 9개국의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제 나온 것을 보면 선물 하나씩 안겨준 셈인데 보면 파키스탄에는 무엇을 주었는지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것인지 무엇을 준 것인지, 또 베트남은 싼 거래가 많은데 WTO 안에 안 들어 있어서 아무런 양보를 안 한 것인지……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양보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신 것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DDA협상담당대사 이재길** 농업협정의 부속서 5(B)에 보게 되면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할 때 상대방이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정문헌 위원** 알았습니다. 외통부는 쌀협상 과정에서 농민단체를 참여시키고,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민단체 일부에서는 지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회에 보고까지도 누락시키는 등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은폐·축소·이면합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비준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이 협상내용의 과정의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협상대상국별 요구내용과 우리의 협상안과 대응, 다음에 계기별 요구내용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양보한 각국별 내용과 이로 인한 우리의 피해내용과 보완대책을 어떤 것을 갖고 들어가셨는지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협상 이해당사자들의 설득과 이해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했던 노력, 예를 들어 설명회라든지 기타 자료를 빨리 만드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 외교청서를 일본 각료회의가 15일 통과를 시켰는데 이 청서에 보면 시네마현 조례에 대해 한국정부의 대일 공세가 강화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다케시마를 고유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 외교적인 과정에서 한 건도 해결 못하고 실패한 것 아닙니까? 외교적인 실패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어제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정문헌 위원** 어제 일본공사 불러서 유감 표명하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일본 외교청서라는 것이 영문판으로 내고 국제사회에 막 돌리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단순히 항의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상서 같은 것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장관께서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96년에 온 것이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정례적으로 온 것은 마지막이 96년이었지만 작년 1월 16일 우리가 독도우표 발행했을 때도 구상서가 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상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구상서라도 보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구상서 보내는 것 하고 우리가 사람을 직접 불러서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문헌 위원** 어쨌든 우리 외교백서도 영문판으로 발행되고 전 세계 공관에 배포되는 아주 훌륭한 홍보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백서를 살펴보면 물론 우리 국토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독도문제를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저런 방법으로 우리 역사문제나 독도문제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요즘 보면 국방부 국방백서나 통일백서도 혁신해서 잘 만들었는데 외교부도 외교백서를 홍보물

로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면 좀 동의를 얻고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본과의 대결에서 일본 안에서 그들의 노력을 바꿔 내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장관께서 가 보셨겠지만 대사관은 그럴듯한데 대사관에는 일본민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동경의 영사관이 어디 OECD 국가 영사관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국가 위신을 생각해서 일본의 동경 영사관부터 좀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감사합니다.

**○정문헌 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볼 건 1분 안에 되는데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철도공사와 관련해서 요즘 오일게이트가 시끄럽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장관께서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사업 건에 대해서 언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최근의 보도 보고 아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러면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허문석 대표 이런 양반들 아시지도 못 하고 모르시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정문헌 위원**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주러대사관,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 등 협조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외공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경제통상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정문헌 위원** 개인기업도 아니고 철도공사가 하는 유전개발사업입니다. 당연히 어떤 협조지원과 상황보고가 있었을 텐데 그 내용 뭐 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전혀 없었습니다.

**○정문헌 위원** 러시아에 지금 산자부·건교부 관련 주재관들 나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나가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런데 러시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걸 몰랐다면 직무유기지요? 공사가 들어가서 유전개발사업을 하는데, 재외공관 업무 중의 하나가 경제통상 지원 아닙니까? 장관께서 보고를 못 받으신 거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데 이걸 몰랐다고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산자관이나 이런 사람이 알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문헌 위원** 산자관도 주재관이 도와주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재외공관의 업무 중의 하나가 경제통상 업무 지원 아닙니까? 그것도 일반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영기업체 공사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다면 당연히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어떤지 사업 관련 문서를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작년 대통령 러시아 방문 때 맞추어서 러시아 페트로사 인수조인식을 거행할 예정이었고 주러 러시아공관도 이에 맞추어서 실무적인 지원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 아닌가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많은 상황이고요. 빨리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문서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정문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정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위원** 질의를 지켜보다 보니까 질의하는 위원들은 10분 안에 많은 질의를 하고 싶어하고 장관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은 답변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답답해 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위원장님께 기왕에 이런 회의 진행을 본회의 진행 방식으로 바꾸든지 해서 답변하는 사람도 시간을 좀 주는 제도를 두어서 그 시간을 빼줄 수 있게 상임위 운영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공식으로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정** 그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숫자가 많아서 물리적으로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의견만 나누어 주시고 합의만 해 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런 식으로 양당 간사끼리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외교라는 것이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이익이라는 게 세계의 정세 환경과 많이 관련되어 있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행은 바꾸어야 하고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외교관

행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온당한 국제정세에 부응하는 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줄여서 쌀협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쌀협상의 내용이 지금 관세화를 10년간 다시 유예한 게 정말 정당하고 나라의 이익에 부응하는 것이냐, 그것에 관련해서 잘못한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이 주된 토론의 요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면계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가지고 국가적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지지 못하고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그러나 덜 중요한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상되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대답하셨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있었지만 이를테면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것, 용어가 어떤 의미인가는 불문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쌀협상에서 이면계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장관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이면계약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계륜 위원**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장관으로서 쌀협상에 이면계약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말씀하신 게 작년 12월 30일 쌀협상 외에 이른바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하셨다고 표현을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신계륜 위원** “부가적 사항이 있고 그것은 검증기간 동안에 죽 협상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명쾌하게 쌀 관련 협상 이외에 다른 사항이 없다고 짐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간에 오해가 생길 소지가 조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12월 30일 문안을 읽어보고, 또 4월 12일자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4월 12일입니다.

**○신계륜 위원** 그걸 인증서 발급으로 개정안 문안대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발표한 글을 보면 ‘아, 이 말이 이 말인 것이로구나’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12월 30일자 언급은 그렇게 명쾌하게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질문도 그런 데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죽 있었고 제가 짐작컨대 우리 정부가 쌀협상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먼저 나와서 협상하려고 의도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쪽이 들고 나오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협상하다 보니까 그걸 안 들어 주려고 했지만 전체적인 타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항들이 케이스별로 협상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런 데 따른 다소간의 표현상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해 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민 일부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혹시 이면계약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오해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경과적인 설명서를 잘 만들어서 우선 관계자들에게 잘 돌리고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노력을, 홍보하는 노력을 잘 보여주어서 여론을 주도하는 층 또는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걸 좀 잘 조목조목 설명하는 그런 자료나 노력이 외교부와 관계부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서 보충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긴밀히 만들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신계륜 위원** 제가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봐도 ‘아, 이렇구나’ 이해는 되지만 오해해서 정말 다른 걸 주고 이면계약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일반 국민이 속을 또는 넘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오해가 있었을 것 같은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는 또 지내 놓고 보면 양자협상 과정에서 사실 저쪽에서 들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협상요

구가 있었다고 우리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공개하는 순간 다른 나라에서 그것보다 더한 요구를 갖고 오고 그래서 이 협상이 전부 아홉 나라를 상대로 해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한꺼번에 종합해서 우리 WTO에서 인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몇 달간의 과정을 우리가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국가별 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면계약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계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신계륜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잘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언론사에도 돌리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국민적 이해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여러 번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것이 없지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없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수위가 달라지고 대통령이 언급하시기도 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정책이 변한 게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없습니다.

**○신계륜 위원** 우리나라 영토임에 분명하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국제분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신계륜 위원** 그런 것이 국가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독도에 대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는 말이에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하면 될 일이지 왜 그것을 정부에서 끌고 가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1954년에 일본에서 이 문제를 ICJ로 가져가서 제소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고로 ICJ에 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ICJ로 가져간다면 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고, ICJ 규정상 선택적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할권에 관한 선택적 조항을 수락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신계륜 위원** 그런 정당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꿀리게 노느냐,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뒤에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여론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하시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일본 국민의 76%가 영토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도 있고,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일본 내의 동향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또 중국의 여러 동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일본의 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과 협조를 잘하는 일방 미국을 가장 중시 여기는 태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악수도 안 하고 국민 간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도 그런 상황인데 과연 6자회담 테이블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걱정이 무척 많습니다. 아마 미국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첫째, 독도문제나 역사왜곡과 관련한 미국의 처지라든지 입장에 대해

서 제가 라이스 국무장관과도 많은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 관계국장이나 차관보가 전부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설명의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과도 동맹이고 일본과도 동맹이고 한국과 일본이 다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독도라든지 독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연원에 대해서 미국이 좀더 신경을 써서 검토하고 우리 입장을 이해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해서 미국 내에서도 역사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이 전부 다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북한 핵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핵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북 간의 문제도 아니고 일·중 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북한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WMD를 규율하려는 전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이고 일본의 국가 이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이나 한국·중국·미국과의 협조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공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동북아의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일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사회·문화교류 분야도 별도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계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6자회담에 대한 걱정은 다 똑같을 것이지만 얼른 감성적으로 느껴지기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대와 압박을 넣으며 이제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6자회담은 각국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데 6자회담에 균열이 와서 다른 상황이 올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또 많은 학자 간에 논쟁이 되는 것이 동북아균형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국제정세가 변화된 상황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말했을 때 이미 그런 것을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마음속에 정책의 공약으로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균형자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참여정부의 어떤 철학 속에서 나왔으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리된 문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부의 공감을 위해서 필요하고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오해는 줄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건이나 책자가 회람용으로든 국민용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이어서 김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웅 위원** 요즘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세에 여러 가지 과도적인 변혁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반기문 장관님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기구분담금 체납 정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 1억 1800만 불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납득이 갑니다.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의무분담금이 아주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에 따른 예산배정의 증가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누적된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 회원국이고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대에 있는 나라인데 국제기구분담금이 계속 체납될 경우 국제기구 내에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전반적인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새로 선출되는데 우리나라 인사가 입후보할 가능성도 있고 2007년, 2008년에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도 추진해야 되고, 또 유엔 개혁에 관련된 안보리 확대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을 강화시켜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기에 체납해소를 해야 되는 정부의 아주 긴박한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각별하게 관련부처와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김 위원님께서 국제기구분담금의 여러 가지 상황과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국가위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기획예산처와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예산제도가 톱다운 방식으로 들어오면서 이만한 액수를 외교부 예산으로 소화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외교부의 전체 톱다운의 사이즈를 크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당국으로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투표권이 정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투표권이 정지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가고 3~4년간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무분담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우리의 경제발전과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 분담금에 있어서 이제 개도국의 지위를 못 받고 GNP가 올라갈수록 그만큼 계속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정부와 국민, 예산당국이 다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지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웅 위원** 최근에 조나단 그리너트 미 7함대 사령관이 북한정권 붕괴 같은 돌발사태 시 미군 투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유사시에 북한을 남한의 수복지역이 아닌 군정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사표현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게끔 하는데 저는 이러한 발언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중요한 문제는 한미 양국 간에 합의 없이, 특히 우리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발언해 달라는 요구를 미국 측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변화하는 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한미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함대 사령관이 아마 원칙적인 자기의 임무 범위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태나 사안에 대한 계획을 얘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것이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당국 간, 외교당국 간에 주의를 환기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웅 위원** 어제도 뉴욕타임스에서 특히 일본교과서가 중국이나 한국교과서 보다 균형이 잡혀 있다는 식의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독도문제나 일본교과서 문제를 제기하면 한국이 보잘것없는 작은 섬에, 또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수준의 냉소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것이 파급되어서 중국에서 저렇게 대규모 반일시위로 나오니까 새삼스럽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미국이 지나치게 편안하게 미·일 동맹체제에 매달려서 주변 국가를 경시하고, 특히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경시하는 정책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계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에 강도 있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유태인 학살문제를 가지고는 심각하게 인도적인 문제, 인권적인 문제로 철저히 하면서 일본의 종군위안부 문제나 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도 미국 조야에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고 신경이 무디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쾌한 얘기인데 미국이 미·일 동맹체제 안에서 한국을 예속시키는 것으로 동아시아정책을 삼으려고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전략적 목표를 공유할 수 있겠느냐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한미 간의 동맹체제가 근본적으로 삐걱거리는 것은 그

런 미국의 대 한반도 경시정책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의 일본교과서 문제, 일본의 군국주의화 문제와 연결해서 설득력 있게 제안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학계나 지식인층, 야당까지도 당파적 관점을 떠나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막 비난하면서도 미·일 동맹체제 속에서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묻으려는 미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는 것도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외교부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쌀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쌀시장 개방을 유보했지만 사실 점진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고,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협상에 대한 책임추궁보다는 협상 이후의 비전과 대안 제시가 더 압도적으로 작동을 해야 우리가 대안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김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일본에 대한 문제부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독도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국가전략적 측면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도 그런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이 주변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끊임없이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일으키는 배경 또는 의도를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본이 전후 60년 되는 과정에서 일본사회 자체가 점차적으로 우경화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세대에 들어와서 과거의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든지 차단이 되는 데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세력의 우경화라든가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었던 사회당이라든지 진보세력이 최근 일본에서 퇴조했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일본의 보수적 우경화가 쉽게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일본의 사회가 우리보다는 좀 늦지 않습니까? 사회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빨리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위기로 볼 때 짧은 시간 내에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독도문제에 대해서 무대응전략, 무시전략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무대응전략이다 이렇게들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외교냐, 무대응 외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난 50년간에 걸쳐서 볼 때 주권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으로 보아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공연히 저쪽의 의도에 말려든다고 생각될 때에는 우리가 대응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익 강경파들이 배를 몰고 독도에 강제 상륙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경, 해군을 동원해서 아주 강하게 퇴치를 한 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때그때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국제사회에 가서는 차라리 이야기를 안 꺼내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대응전략이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응전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했다든지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제기를 해 왔습니다.

**○신기남 위원** 무대응전략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신기남 위원**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자

들이 ‘무대응전략으로 일관해 왔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침묵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침묵으로 인정되어 버리니까……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예를 들면 외국의 교과서나 지도나 관광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통하고 있는데 외국의 언론사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독도영유권을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의 단체들이 주장하는 노력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국내적으로는 독도의 영유권을 더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이미 취해 나갔습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내왕도 허용을 했고 국제적으로 볼 때 이러한 노력은 과거에도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독도나 역사 왜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라든지 주요 요인들 만날 때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식민지를 당하다 보니까 모든 제도의 틀이 잡히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당한 입장이 알려지기 전에 일본의 입장이 먼저 국제사회에 알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지도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일대반격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요.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도 양국의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서로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파동이 났을 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반크(VANK)라든지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라든지 일본에서는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 이런 것이 있다면서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신기남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줄어들고 금년에는 없는 것 같아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면이 있고 외교부의 여러 가지 예산적인 제약 때문에 지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신기남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제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신기남 위원** 실제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선 예산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기획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신기남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요. 시민사회를 지원해서 해야지 화만 내고 싸움 걸고 해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일본 사람들 인식이 바뀌지 않는데……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지원을 해서 그쪽을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일관계가 경색되니까 양국 통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기업인들이 하거든요.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기업활동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15%이고 앞으로 악화가 장기화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람이 55%가 됩니다.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방침은 독도나 역사 왜곡 문제는 그대로 추진하고 경제·문화 교류는 계속 추진한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단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55%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점을 잘 유념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외교통상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소개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국제기구분담금 체납문제는 김원웅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투표권을 상실하는 기준까지는 아직 안 갔나요? 몇만 불 되면 상실되는 것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마 2년 체납하면 상실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야지요.

**○신기남 위원** 이것 외교부 일반예산 말고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때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국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ODA라든지 PKO, 국제기구 분담금을 별도체계, 별도계정으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외교부 전체예산으로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외교부 예산의 80%가 전부 다 경직성입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PKO 활동비, 또 ODA 지원금,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외교부의 활동경비는 총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러니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지요. 저희가 협조를 할 테니까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국제사회에서 알아달라고만 하는데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줍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기남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위원장 임채정** 신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 장영달입니다.

대통령을 수행하셔서 외교적인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셨다고 들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지중해 가운데 사이프러스라는 섬나라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 나라가 지금 분단 상태에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북사이프러스에 터키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거기에 그리스계가 80%, 터키계가 20%인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터키가 가까우니까 터키가 들어와서 국토의 반 정도를 점유하고 터키의 1개 군단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더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 문제는 국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작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북사이프러스하고 남사이프러스로 되어 있는데 북사이프러스는 터키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키만이 유일하게 승인을 한 나라이고 일종의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Greek 계통의 남사이프러스는 우리도 1995년에 승인했고 많은 나라들하고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소하자는 중재안을 냈는데 작년 4월에 국민투표를 했는데 국민투표에 의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러면 지금 터키군이 들어와 있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현재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나기 때문에 유엔의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이 가 있고 국회의 황진하 의원이 유엔 FICYP 사령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장영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법적으로는 결국 터키군이 물러나줘야 정상이 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터키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사무총장이 중재안을 냈는데도 이것이 Greek계 사이프러스에 의해서 거절이 되었습니다. 부결되어 가지고 현재 계속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생각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지금 독도에는 해경이 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장영달 위원** 경찰이 가 있는데 백령도나 다른 도서들은 대개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곳은 다 군대가 가 있는데 독도는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경찰이 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도 당연히 해병대라든지 군이 영토를 사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때마다 정부는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을 보내서 괜히 자극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답

변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령도는 서해 특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거기가 군사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고, 독도는 우리의 일반 행정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경찰들이 지금 서울 시내나 다른 도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국가 안보적으로나 국방상에 위협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군대가 가서 주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위원** 그런데 요새 일본이 하는 짓을 보면 북한이 백령도에 시비 거는 것보다 더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보 파악한다고 그러고, 신문사 비행기라고 하고 오고, 정보비행기 비슷한 것들이 날아오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 격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나 일본의 정보비행이나 이런 것도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독도에 영해가 있고 영해에 따른 영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활동을 안 하고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지금 백령도의 경우에는 북한하고 군사적으로 완전히 대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위원**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앞으로 군사적인 도발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대비책을 갖추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거기는 해경이 철저히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 문제는 국방당국하고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종전에 신기남 위원께서 분담금 이야기했었는데 작년에 유엔에 가 보니까 우리가 분담금을 책정받은 만큼 유엔 직책을 우리한테 할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도 한국이 부담하게 되는 분담금에 맞는 직위 이런 것들을 내놔라. 그러면 돈을 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원칙적으로 분담금과 비례해서 유엔의 직위를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담금을 많이 내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담금 내는 순서로 볼 때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많이 내지만 그 나라들은 상당히 Under-represent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담금 내는 것만큼 유엔에의 진출이 만족스럽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 고위직으로서는 WHO에 이종욱 사무총장, ESCAP에 김학수 사무총장이 전부 다 유엔 사무차장급으로 나와 있고, 기타 IAEA라든가 다른 부서에도 다수의 고위간부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위직 진출을 정부의 하나의 정책으로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동북아 상황 전개를 예측해 보건대 우리가 유엔의 좀더 중요한 요직에 찾아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장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관, ODA 총액이 금년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3억 6000만 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내년에는 얼마나 될 것으로……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내년에 예산을 심의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정** 아니, 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GDP의 0.01%로 하면 약 1200억이나 1500억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우리 예산체계가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체계상 ODA자금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 예산이 약 8억 불 정도 되면 3억 6000만 불은 이미 ODA로 해서 나가고……

**○위원장 임채정** 그러니까 그냥 증액을 시켜 달라는 뜻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ODA든지 유엔분담금을 별도계정으로 넣으면……

**○위원장 임채정** 지금 별도계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것은 예산당국에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여러 가지 특별계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놓으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생각만 마시고 이미 지금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그러면 이런 예산요구를 반영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현재 이것을 별도계정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외무상원조기본법이랄까 그런 것의 제정을 추진해서 대외무상원조라든지 국제기구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다른 나라에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다른 나라의 경우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갖고 있는데 ODA만 한 100억 불 이상 됩니다.

**○위원장 임채정** 독도 일본영토 주장에 대해서, 이를테면 노일전쟁 때부터 이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를 논박하는 글 같은 것을 우리 외교부 사이트 같은 데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논박하는 글 같은 것을……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5분만 하세요.

**○홍준표 위원** 장관님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동북아균형자론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이 명확한 뜻이 장관님 말씀에 안 나옵니다. 아까 김숙 북미국장 이야기는 균형자 역할(balancer role)을 미국하고 다 합의를 보았다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건 합의볼 사항은 아니고……

**○홍준표 위원** 이해를 구했다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홍준표 위원** 균형자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천칭저울의 추같이 힘이 한쪽으로 몰릴 때에는 저울추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런 뜻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되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가치추구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트해 나갈 수도 있고 우리 외교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많이 조정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추가 왔다갔다 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등이 있을 때 이러한 갈등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조화로운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을 피해 가시는데 대통령께서 동북아균형자론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 말씀하고 해설해 놓은 것을 보면 명확히 그 뜻은 아닙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아니고 저울추 역할을 하겠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 100년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100년 전보다 국력이 신장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장관님도 국력 이야기를 했고 조정자 역할이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50년간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은 미국이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니까 20세 초에 들어와 가지고 동북아에서 청일전쟁, 노일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있었고 또 대동아전쟁이라고 일본에서 그러는데 2차대전이 있었고, 20세기 초에 큰 전쟁이 네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1953년 한국전쟁 이후에 50년 동안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온 가장 큰 배경을 외교 전공한 학자들은 전부 미국의 동북아균형자 역할로 봅니다. 냉전시대에 러시아나 중국이 힘을 발휘할 때에는 미국이 여기에 균형자 역할을 다 해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한국이 하겠다는 그 뜻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정확히 미국이 냉전시대 때 동북아에서 했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나는 그 뜻을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균형자론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물어보고 해도 정확한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개념은 정확한데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를 들어서 좀더 그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역내 여러 가지 국가간에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은 화해와 협력으로 풀어 나가고……

**○홍준표 위원**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동북아에서 남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이 있지요. 사실상 갈등의 중심에 남북한이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남북한이 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데 갈등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어떻게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남북한의 문제나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 이런 데서 일종의 평화의 균형자라고 그럴까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준표 위원** 장관님, 내가 말씀의 뜻은 알겠어요. 장관님이 대통령께서 뱉어 놓은 말씀을 설명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밸런스 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런 역할을 계속 주장하니까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국방비용,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자주국방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자주국방의 의미는 틀리지요. 그때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세우는 자주국방론이라는 것은 민족주의 남북공조를 기초로 자주국방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닙니다. 지금 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그 기초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홍준표 위원** 그런데 장관님 그 말씀은 지금 학자들이나 외교전문가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한미동맹 자꾸 약화되어서 국익에 손실을 초래한 게 2003년 전쟁예비물자 WRSA 이 프로그램 폐기방침을 우선 통보했지요? 이거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국방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폐기되면 국방예산이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야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예비물자 다 비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국방예산이 몇 조 되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교적인 실수 가지고, 외교적인 말 잘못한 거, 또 외교방향을 잘못 틀어 가지고 한국국민이 부담해야 될 막대한 국방비 이걸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지난해 전 국민이 1인당 310만 원의 세금부담을 했어요. 그렇게 경기가 나빠도 세금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여기에다가 대통령이 외교방향을 잘못 트는 바람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막대한 국방비에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교 문제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라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건 대수롭지 않지요. 그러나 경제적인 이익, 국익, 국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 이걸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이즈미를 부시의 푸들이라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를, 파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럽에서 부시의 푸들이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영국이 대한민국보다 힘이 달립니까? 국력이 달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 지도자들이 부시의 푸들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미·일동맹이나 영·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까? 그것은 강화를 하면 국익에 이득이 오거든요.

지금처럼 대통령께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외교부장관이 그 뒷수습하려고 뛰어다녀 본들 그 뒤에 돌아오는 게 뭐예요? 아까 북미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밸런스 롤을 미국이 양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은 노 대통령이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방침을 거듭 천명한 것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고 있다" 거기에 "전쟁예비물자 프로그램 폐기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노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WRSA 프로그램이 폐기되면서 우리한테 돌아올 국방비 증액 부분 이게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 놓고 오늘 하루 종일 장관께서 말을 정확히 설명을 하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힘도 좀 있고 나라도 부강해졌으니까 국방비도 우리 돈 내고 하고 미국 물러가라 너희하고 안 하고 우리가 동북아의 중심국가 중심축으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좋다 이겁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위원장 임채정** 자……

**○홍준표 위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막대하게 증액될 국방비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부담해 나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나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 나라는 민족주의 없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부시의 푸들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어떻게 미·일동맹 영·미동맹을 강화합니까?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끝나면 좋아요. 다음정부에서 국방비 증액된 걸 어떻게 복원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장관께서, 아까 외교참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이 아니라 참모라도 좋습니다. 대통령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국민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외교를 해 주어야지 밖에 나가서 불쑥불쑥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그 부담을 외교부가 하는 것은 참으로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보좌하세요.

**○위원장 임채정** 장관께 나도 끝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자꾸 이 논쟁에 있어서 힘이 중심 개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른바 균형자론에서 균형적 역할을 할 경우 무슨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하겠느냐 이 뜻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위원장 임채정** 그래서 얘기가 자꾸 번져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반대논거가 지금 물리적인 힘이 없으면서 무슨 균형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라는 게 이른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구조적 힘이라고 말하는 규범과 가치, 예를 들면 간디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그런 규범적인 힘, 가치의 힘 이런 걸 가지고 때로는 화해도 시키고 때로는 협상도 하고 그러는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꼭 물리적인 힘으로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이 그러한 국제질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치·민주·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성장해서 국력이 있고 외교력도 있고 국제무대에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의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도덕적 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총체적으로 해서 일종의 소프트 파워로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정**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학문적으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붙기 시작하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정부로서는 이런 오해가 되었든 이론이 되었든 이런 반론이 크게 나올 수 있게끔 허점을 보였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하고 준비하셔서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문헌 위원께서 자꾸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길어지니까……

**○정의용 위원** 우리 당에서도 한 사람이 보충질의를 해야겠는데요.

**○위원장 임채정** 정의용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끝내 주세요.

**○정의용 위원** 장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균형자 역할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인지 장관님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국가적 목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 통일이라고 봅니다. 민족통일을 달성하는 방법이 전쟁 등의 물리적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서는 결과가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 더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달성하는 방법을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질서 있는 방법을 통해서 통일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국가의 최대목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최근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도록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국가목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외교목표가 된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화해·협력을 확대해서 단계적이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투명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고요.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중견국가이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우리 주

변 강대국만큼은 갖추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도덕적 정통성, 또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 힘을 바탕으로 중견국가로서 주변 강국들의 조정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미 그런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우리가 사실상 제안해서 성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1차적 관문이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가 막혀 있다고 보는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빨리 복귀해야 되고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6자회담을 다자 간 안보공동체로 발전시킨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과거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이 주변국들에 의해서 더 이상 디파인(define)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균형자론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균형자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균형자론에 대한 데피니션(definition)을 명확하게 준비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주변국들한테는 불필요한 경계심을 유발했고,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한테는 너무 지나친 기대감을 줬고 일부 국민들한테는 오늘 장관님이 하루 종일 야당 위원들로부터 들으신 것처럼 상당한 우려를 야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정부의 현재 정책을 입안하고 이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책을 너무 똑 부러지게 디파인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러한 것은 후대역사가들이 할 일이 아니냐, 당시에 꼭 해야 된다면 학계나 언론계에서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의 독트린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굳이 그렇게 데피니션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행동의 폭이 스스로 작아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전략적 모호(strategic ambiguity)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선 동북아균형자론의 배경이라든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을 똑 부러지게 우리가 규정짓는 것보다는 외교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제대로 이러한 철학적인 배경이라든가 비전, 특히 비전을 내걸었을 때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정부가 노력해서 국민의 이해를 확실히 도모하고 우방국한테도 큰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문헌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딱 1분입니다.

**○정문헌 위원** 장관님은 얼마나 말씀하실지 몰라도 제가 하는 것은 1분입니다.

아까 홍준표 위원님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외교력도 증가했고 경제력도 증가했고 도덕적인 힘도 증가해서 전반적인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이번에는 중재하시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밸런싱이 아니라 미디에이트(mediate)를 하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요즘 코미디처럼 '그때그때 달라요'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든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든 국제사회와 국제체제가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사랑했고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합니까, 중국이 인정합니까, 러시아가 인정합니까, 미국이 인정합니까? 동북아에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주변국가들이 그것을 다 인정한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왜 다른 주변국가가 우리의 역할을 인정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문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들이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가 인정하게끔 만들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력, 이익, 여기는 소프트 파워가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까 장관께서는 고전적인 세력균형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쪽에 편승을 해서 동북아에서 패권이 완전히 깨지면서 다른 형태의 패권이 구성되는 여건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도 명쾌하게 내릴 수 없는 개념을…… 또 다자안보개념도 쓰시던데 균형자와 다자안보는 안 맞는 개념이고 다 아시다시피 다자안보는 유럽처럼 집단안보체제도 경험하면서 국가 간에 신뢰도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북아에서는 교과서문제, 영토문제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다자안보협의도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잘 되면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정문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균형자 역할, 더 나아가서 다자안보를 이룩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가 들어오면 우리도 힘이 있다…… 말이라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상대방에서 자꾸 오해의 여지가 강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고리 형태의 좌충수를 두기 때문에 도강양해라는 의미를 새겨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제관계를 도덕주의, 규범과 가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이라크전쟁이 도덕주의, 규범과 가치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국제관계를 도덕주의, 규범과 가치……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는 도덕주의, 규범과 가치 측면에서 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까? 일본이 독재주의국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현재 국제질서는 그러한 틀, 규범·도덕성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 18세기나 19세기와는 다릅니다.

**○홍준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균형자론을 이야기했으면 떳떳하게 우리도 힘이 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식대로 해 보겠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국민들도 우리도 이제 컸으니까 우리 돈 내서 해 보자는 식으로 설득이 되겠지요.

그런데 말은 던져 놓고 감당을 못 하고,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해 준 것이 정말로 한국을 생각하고 대접해서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노 대통령이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 방침을 거듭 천명한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한국을 조롱한 것이지 정말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방비 부담액이 늘어난 것만 해도 천문학적인데, 실제 한국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을 바꾸어서 도덕주의, 규범과 가치로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이야기냐는 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말씀 중에 국가에서 정책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국민이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해서 10년 내에 어떠한 국방력을 가지겠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비전입니다. 그러면 그 비전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나 체제는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홍준표 위원**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이나 영국 국민, 일본 국민은 앉아서 우리는 한국보다 10배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자위대도 있다, 우리 미·일동맹 안 해도 된다, 동북아에서 우리가 패권을 잡을 수 있다,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일본은 군사력도 만만치 않고 경제력이 우리의 약 10배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나 일본은 도덕성이 없지요.

**○홍준표 위원** 일본이 도덕성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 영국의 경우는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본과 영국을 우리와 같이 비교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위원** 지금 장관이 장관답지 않은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장관은 실용주의자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모든 외교는 실용주의로 나가야지요. 외교가 무슨 이론과 주의가 필요합니까? 좌파외교가 있고 우파외교가 있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국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우리 돈 덜 쓰고 국민들 편안하게 해 주고 어떤 식으로든 체제를 빌릴 수 있으면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덕주의, 마치 국내에서 내치하듯이 하는데 도덕주의, 규범과 가치는 강단에서나 해야지요.

**○위원장 임채정** 그 문제는 가치의 문제와 국익

해석의 문제가 꽤 깊이 깔려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 학문적인 논쟁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에서 토론을 끝내도록 하고 더 계속하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전여옥 위원 한명숙 위원 정의화 위원 이성권 위원 장영달 위원 등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 중 김혁규 위원, 정문헌 위원 등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의 업무에 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 및 해외 긴급구호체제 강화 촉구결의안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2004년 12월 26일 남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은 국가의 정부 및 국민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 국가의 조속한 피해복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인류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진해일 피해국 및 그 외 국제적 재난에 대한 복구지원 등 관련 대외원조정책이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대외원조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적 이미지와 국제위상 제고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막대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입은 남아시아지역 국가의 정부와 국민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신속한 피해복구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와 중장기적 재건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구체적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제적 재난 등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재난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외공식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맞게 대외원조집행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외원조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평화협력 이미지와 국가위상 제고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유의하여 우리 정부가 대외원조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인류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진해일 피해국 및 그 외 국제적 재난에 대한 복구지원 등 대외원조정책이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기 바람.

---

**○出席委員(23人)**

| | | | |
|---|---|---|---|
| 권영길 | 김덕룡 | 김문수 | 김부겸 |
| 김원웅 | 김혁규 | 박계동 | 박성범 |
| 신계륜 | 신기남 | 원희룡 | 유선호 |
| 이성권 | 이화영 | 임종석 | 임채정 |
| 장영달 | 정문헌 | 정의용 | 정의화 |
| 최성 | 최병국 | 홍준표 | |

**○請暇委員(2人)**

전여옥 한명숙

**○出席專門委員**

| | |
|---|---|
| 수석전문위원 | 김용구 |
| 전문위원 | 김성원 |

**○政府側參席者**

외교통상부

| | |
|---|---|
| 장관 | 반기문 |
| 차관보 | 송민순 |

| | |
|---|---|
| 기 획 관 리 실 장 | 김 성 환 |
| 외교정책홍보실장 | 천 영 우 |
| 북 미 국 장 | 김 숙 |
| 구 주 국 장 | 최 일 송 |
| 조 약 국 장 | 정 해 웅 |
| 다 자 통 상 국 장 | 김 성 배 |
| DDA(도하개발어젠다) 협 상 담 당 대 사 | 이 재 길 |